

발표자료집

4대 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2022년 11월 15일(화), 13:30 ~ 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GRAND HALL)

- 주최 :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후원 : 매일경제신문사

[4대 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00~13:30	등록 및 접수
13:30~14:00	사회: 김태동 차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개회식] 개회사 한 준 한국사회학회 회장 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김진표 국회의장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14:00~15:00	사회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Session 1 :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수 강우창, 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00~15:20	휴식
15:20~17:20	사회 :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Session 2 : 학회별 주제 발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함께 잘사는 혁신강국” -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인구감소, 지방소멸 - 치명적 위기인가?” -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정치의 미래와 정치개혁”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Global Poly-Crisis와 재정정책 대응 방향”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토론] 김인수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17:20~17:30	휴식
17:30~18:00	[Session 3 : 종합 토론]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 준 한국사회학회 회장

Contents

[개회식]	1
-------	---

[설문조사 결과 발표]	3
--------------	---

[학회별 주제 발표]

◆ 함께 잘사는 혁신강국	55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인구감소, 지방소멸 – 치명적 위기인가?	69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정치의 미래와 정치개혁	75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Global Poly-Crisis와 재정정책 대응 방향	87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종합토론]	115
--------	-----

개회식



김태동 | 사회

- (현) 차 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경영대학원장)
- (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 (전)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한 준 | 개회사

- (현) 한국사회학회 회장
- (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



정해구 | 환영사

- (현)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진표 | 축사

- (현) 제21대 국회의장 (5선 국회의원)
- (전) 제6대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



서양원 | 축사

- (현) 매일경제 대표이사 전무
- (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 (전) 세계지식포럼 총괄국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수

강우창, 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ession1 :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신인철 | 사회

- (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현) 서울시 안심소득자문단, 시정여론조사 자문위원
- (현) 한국사회학회, 한국인구학회 총무이사



설동훈

- (현)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현)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 (현)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이민학회 회장



고영희

-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수
-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 (전) 한국창업학회 부회장
- (전) 한국전력기술(주) 비상임이사



강우창

-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은

-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 국립싱가포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신관호

-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 한국경제학회 이사
- (전)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여야 국회의원, 기업인, 사회과학자 대상 표본조사 결과 분석

2022.11.15.

설동훈 (전북대학교, 한국사회학회)

강우창 (고려대학교, 한국정치학회)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국경영학회)

신관호 (고려대학교, 한국경제학회)

목차

I. 조사 개요

II. 여당·야당 국회의원 조사 결과 분석

III. 기업인 조사 결과 분석

IV. 사회과학자 조사 결과 분석

V. 조사집단 간 비교분석

I. 조사 개요

설동훈 (전북대학교, 한국사회학회)

연구진

□ 연구팀의 구성

-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의 네 학회 회장들이 모여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목)과 11월 15일(화)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합의
- 각 학회를 대표한 전문가 4인이 모여서, 설문 문항 개발,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를 공동으로 준비: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한국사회학회, 연구팀장), 강우창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정치학회),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한국경영학회),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경제학회)

□ 조사 주체

-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개발연구원
- 후원: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신문사

조사모집단

□ 조사모집단

- 조사 대상: 3월 조사에서는 네 학회 회원 대상 표본조사를 진행했다면, 10월 조사에서는 여당·야당 국회의원, 기업인, 네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 확대하여, 다음 네 집단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
- 여당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국민의힘)
- 야당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 기업인: 명함 관리 앱 리멤버(<https://rememberapp.co.kr>)에 등록된 직장인 중 임원 이상 직급자
- 사회과학자: 정치·경제·사회·경영학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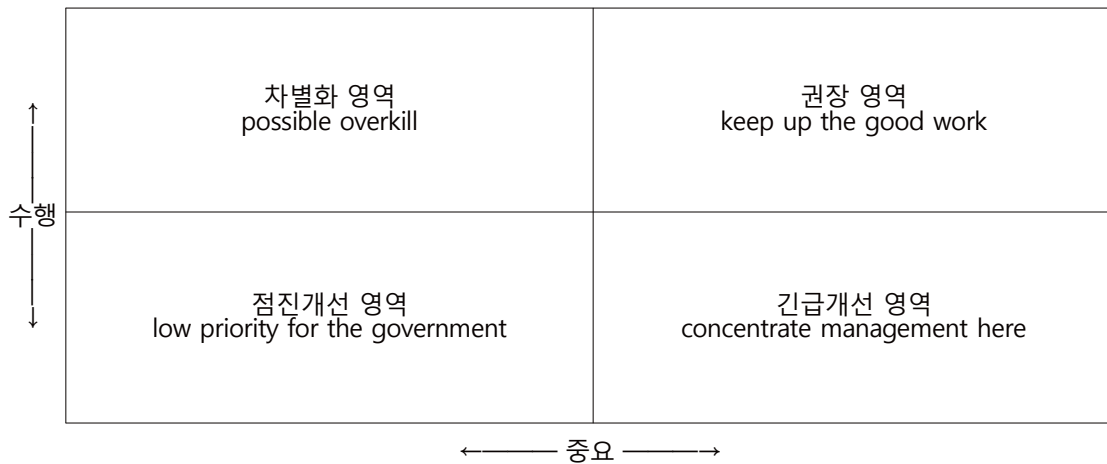
문항 개발

□ 문항 개발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경영·정치·사회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 42개'에 대한 '중요도'(importance)와 '정부가 해당 정책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하는가', 즉 '수행도'(performance) 조사
- 3월 조사에서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꼽은 상위 10개 정책과제, 그리고 차순위 30개 과제 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10개 정책과제'(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의 6개 정책 분야), 즉 20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조사
- 10개 정책현안 해결 방법 선호도 조사 등

주요 분석방법: 중요도-수행도 분석

□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실사

□ 실사 fieldwork

- 실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대행
- 조사방식: 웹조사(web survey)
- 조사 대상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조사 참여 독려
- 목표 표본 수: 여당·야당 국회의원 각 20명, 기업인 100명, 네 학회 회원 각 200명 즉 800명. ※ 목표 표본을 달성하면, 해당일에 조사 종료. 목표 표본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11월 6일 조사 종료.
- 조사 참여자 초청 방식: (1) 여당·야당 국회의원: <매일경제> 기자가 의원실에 연락하여 조사 참여 독려. (2) 기업인: 리멤버 앱을 개발한 드라마앤컴퍼니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 (3)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원: 각 학회에서 목표 표본을 달성할 때까지 수 차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
- 조사 기간: (1) 여당·야당 국회의원: 10월 17일~11월 6일. (2) 기업인: 10월 19일~10월 28일. (3) 사회과학자: 10월 14일~11월 6일(경제학회·사회학회는 10월 18일, 정치학회는 19일 시작)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 유효 응답 표본 수: 여당·야당 정치인 각 17명, 기업인 100명, 네 학회 회원 636명(한국경영학회 219명, 한국경제학회 123명, 한국사회학회 105명, 한국정치학회 189명)
-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참조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기업인	사회과학자
전체		17	17	100	636
성별	남자	14	13	97	540
	여자	3	4	3	96
연령	30대 이하	5	9	0	43
	40대	5	4	31	148
	50대	6	3	61	215
	60대	1	1	7	162
	70세 이상	0	0	1	68
학력	대학원 석사 과정 이하	15	15	88	16
	대학원 박사 과정 이상	2	2	12	620
최종학위 취득연도	1980년대 이전	0	1	13	91
	1990년대	4	1	39	152
	2000년대	8	9	25	192
	2010년대	4	4	19	158
	2020년대	1	2	4	43
직장	대학	0	0	0	461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	0	0	0	61
	기업 및 기타 민간 연구소	0	0	0	34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17	17	0	11
	기업	0	0	100	34
	기타	0	0	0	17
	없음	0	0	0	18

※ 학회별 응답자 수: 한국경영학회 219, 한국경제학회 123, 한국사회학회 105, 한국정치학회 189.

Ⅱ. 여당·야당 국회의원 조사 결과 분석

강우창 (고려대학교, 한국정치학회)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평균
	사례수	%	%	%	%	%	%	점
정치 분야	(17)	5.9	41.2	35.3	17.6	47.1	52.9	2.4
외교·안보 분야	(17)	17.6	70.6	11.8	0.0	88.2	11.8	3.1
경제 분야	(17)	17.6	47.1	35.3	0.0	64.7	35.3	2.8
기업 분야	(17)	11.8	52.9	35.3	0.0	64.7	35.3	2.8
사회 분야	(17)	0.0	41.2	47.1	11.8	41.2	58.8	2.3
문화·교육 분야	(17)	0.0	70.6	29.4	0.0	70.6	29.4	2.7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평균 점
	사례수	%	%	%	%	%	%	
정치 분야	(17)	0	11.8	41.2	47.1	11.8	88.2	1.6
외교·안보 분야	(17)	0	11.8	47.1	41.2	11.8	88.2	1.7
경제 분야	(17)	0	11.8	29.4	58.8	11.8	88.2	1.5
기업 분야	(17)	0	11.8	76.5	11.8	11.8	88.2	2.0
사회 분야	(17)	0	17.6	58.8	23.5	17.6	82.4	1.9
문화·교육 분야	(17)	0	29.4	58.8	11.8	29.4	70.6	2.2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 여당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17)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100.0	0.0	0.0	100.0	1	1.1	1	94.1	5.9	0.0	94.1	3	1.3	1
2.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94.1	5.9	0.0	94.1	5	1.6	5	100.0	0.0	0.0	100.0	1	1.8	4
3.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94.1	5.9	0.0	94.1	5	1.6	5	94.1	5.9	0.0	94.1	3	1.9	9
4.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94.1	5.9	0.0	94.1	5	1.8	12	100.0	0.0	0.0	100.0	1	1.6	2
5.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94.1	5.9	0.0	94.1	5	1.6	5	94.1	5.9	0.0	94.1	3	1.8	4
6.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4.1	5.9	0.0	94.1	5	1.6	4	94.1	0.0	5.9	88.2	16	2.0	13
7.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88.2	11.8	0.0	88.2	12	2.1	15	76.5	23.5	0.0	76.5	23	2.6	26
8.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76.5	17.6	5.9	70.6	29	2.3	21	94.1	0.0	5.9	88.2	16	2.2	20
9.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94.1	5.9	0.0	94.1	5	1.7	9	94.1	5.9	0.0	94.1	3	2.1	16
10.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00.0	0.0	0.0	100.0	1	1.6	5	94.1	0.0	5.9	88.2	16	2.2	20
11.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100.0	0.0	0.0	100.0	1	1.5	3	94.1	5.9	0.0	94.1	3	2.1	16
12.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0.0	0.0	0.0	100.0	1	1.2	2	94.1	5.9	0.0	94.1	3	1.8	4
13.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88.2	5.9	5.9	82.4	18	2.1	15	94.1	0.0	5.9	88.2	16	2.1	16
14.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94.1	5.9	0.0	94.1	5	1.9	13	94.1	5.9	0.0	94.1	3	2.0	13
15.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연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76.5	23.5	0.0	76.5	22	2.5	29	76.5	23.5	0.0	76.5	23	2.6	26
16.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82.4	11.8	5.9	76.5	22	2.4	24	82.4	11.8	5.9	76.5	23	2.6	26
17.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58.8	35.3	5.9	52.9	37	2.9	36	70.6	23.5	5.9	64.7	34	2.6	32
1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64.7	29.4	5.9	58.8	36	2.7	33	58.8	35.3	5.9	52.9	37	2.8	35
19.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70.6	23.5	5.9	64.7	32	3.0	37	76.5	17.6	5.9	70.6	28	2.7	34
20.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70.6	23.5	5.9	64.7	32	2.6	31	76.5	17.6	5.9	70.6	28	2.6	26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70.6	23.5	5.9	64.7	32	2.9	34	70.6	29.4	0.0	70.6	28	2.6	26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 여당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22.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82.4	11.8	5.9	76.5	22	2.6	30	82.4	11.8	5.9	76.5	23	2.2	20
23.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70.6	17.6	11.8	58.8	35	3.0	37	82.4	17.6	0.0	82.4	20	2.5	24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47.1	35.3	17.6	29.4	42	3.5	42	64.7	29.4	5.9	58.8	36	2.9	37
2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8.2	5.9	5.9	82.4	18	2.0	14	94.1	5.9	0.0	94.1	3	1.6	3
26.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88.2	5.9	5.9	82.4	18	1.7	9	94.1	5.9	0.0	94.1	3	1.9	9
27.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4.7	17.6	17.6	47.1	38	2.9	34	76.5	11.8	11.8	64.7	33	2.5	25
28.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82.4	11.8	5.9	76.5	22	2.4	24	52.9	35.3	11.8	41.2	41	3.1	41
29.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94.1	0.0	5.9	88.2	12	2.2	18	64.7	23.5	11.8	52.9	39	2.9	39
30.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6.5	23.5	0.0	76.5	22	2.3	21	70.6	17.6	11.8	58.8	35	2.6	32
31.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76.5	17.6	5.9	70.6	29	2.6	31	76.5	17.6	5.9	70.6	28	2.9	37
32.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8.2	11.8	0.0	88.2	12	2.4	24	76.5	17.6	5.9	70.6	28	2.6	26
3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58.8	29.4	11.8	47.1	38	3.0	37	58.8	35.3	5.9	52.9	37	2.9	39
3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52.9	29.4	17.6	35.3	41	3.2	41	58.8	17.6	23.5	35.3	42	3.2	42
35.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64.7	17.6	17.6	47.1	38	3.0	37	70.6	5.9	23.5	47.1	40	2.8	36
36.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82.4	11.8	5.9	76.5	22	2.4	24	94.1	5.9	0.0	94.1	3	2.0	13
37.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82.4	17.6	0.0	82.4	16	2.2	18	94.1	5.9	0.0	94.1	3	1.9	9
38. 북한 비핵화 추진	76.5	11.8	11.8	64.7	31	2.3	21	88.2	5.9	5.9	82.4	21	1.8	8
39.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82.4	11.8	5.9	76.5	22	2.2	20	88.2	5.9	5.9	82.4	21	2.1	19
40.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82.4	17.6	0.0	82.4	16	2.4	24	82.4	11.8	5.9	76.5	23	2.3	23
41.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88.2	11.8	0.0	88.2	12	1.7	9	94.1	5.9	0.0	94.1	3	1.8	4
42.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88.2	5.9	5.9	82.4	18	2.1	17	94.1	5.9	0.0	94.1	3	1.9	12

주: 평균은 '매우 중요' 7점,, '보통' 4점,, '전혀 중요치 않음'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 야당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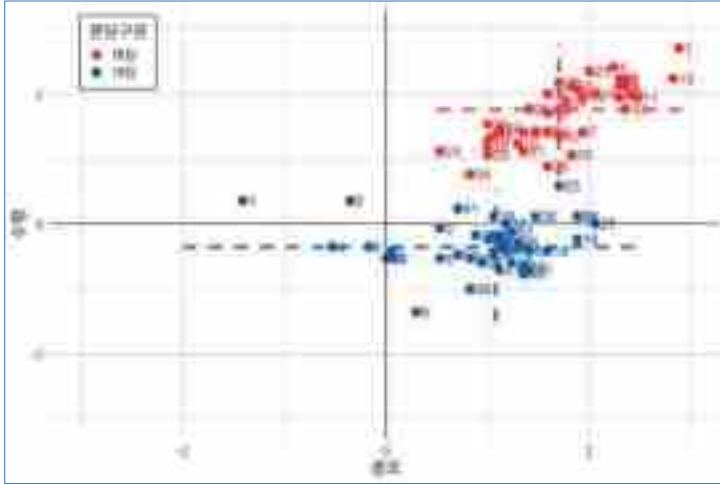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23.5	5.9	70.6	-47.1	42	2.6	42	52.9	17.6	29.4	23.5	1	4.4	2
2.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29.4	29.4	41.2	-11.8	39	3.6	40	35.3	29.4	35.3	0.0	13	4.4	2
3.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58.8	5.9	35.3	23.5	34	4.5	33	35.3	23.5	41.2	-5.9	18	3.9	11
4.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29.4	11.8	58.8	-29.4	41	3.5	41	35.3	17.6	47.1	-11.8	24	3.6	20
5.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58.8	17.6	23.5	35.3	33	4.5	33	23.5	23.5	52.9	-29.4	38	3.5	31
6.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23.5	35.3	41.2	-17.6	40	3.8	39	29.4	11.8	58.8	-29.4	37	3.6	20
7.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35.3	23.5	41.2	-5.9	38	4.1	36	29.4	35.3	35.3	-5.9	16	3.6	24
8.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47.1	17.6	35.3	11.8	36	4.3	35	17.6	11.8	70.6	-52.9	42	2.6	42
9.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47.1	17.6	35.3	11.8	36	4.1	36	11.8	41.2	47.1	-35.3	40	3.5	31
10.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88.2	0.0	11.8	76.5	7	5.4	8	23.5	35.3	41.2	-17.6	32	3.3	38
11.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47.1	47.1	5.9	41.2	31	4.7	31	35.3	23.5	41.2	-5.9	18	3.5	29
12.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88.2	5.9	5.9	82.4	4	5.9	2	58.8	0.0	41.2	17.6	6	4.1	5
13.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64.7	29.4	5.9	58.8	20	4.9	28	35.3	29.4	35.3	0.0	13	3.8	13
14.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64.7	23.5	11.8	52.9	22	5.2	16	23.5	35.3	41.2	-17.6	32	3.6	24
15.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연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82.4	5.9	11.8	70.6	8	5.2	16	17.6	52.9	29.4	-11.8	24	3.7	18
16.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94.1	0.0	5.9	88.2	1	5.9	2	41.2	5.9	52.9	-11.8	24	3.8	16
17.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82.4	11.8	5.9	76.5	6	5.1	22	35.3	17.6	47.1	-11.8	24	3.6	24
1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76.5	17.6	5.9	70.6	11	5.6	6	35.3	11.8	52.9	-17.6	32	3.6	24
19.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70.6	17.6	11.8	58.8	18	5.2	14	35.3	11.8	52.9	-17.6	32	3.4	35
20.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64.7	17.6	17.6	47.1	27	4.8	29	41.2	5.9	52.9	-11.8	24	3.5	31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76.5	11.8	11.8	64.7	14	5.1	19	41.2	0.0	58.8	-17.6	30	3.3	38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 야당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22.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64.7	17.6	17.6	47.1	27	5.1	19	35.3	17.6	47.1	-11.8	24	3.6	20
23.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76.5	17.6	5.9	70.6	11	5.4	10	41.2	5.9	52.9	-11.8	24	3.4	37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64.7	23.5	11.8	52.9	22	4.9	27	35.3	17.6	47.1	-11.8	24	3.4	35
2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8.2	5.9	5.9	82.4	4	5.7	5	35.3	41.2	23.5	11.8	7	4.6	1
26.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88.2	5.9	5.9	82.4	4	5.9	2	47.1	23.5	29.4	17.6	4	4.1	5
27.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94.1	0.0	5.9	88.2	1	6.1	1	35.3	29.4	35.3	0.0	13	4.0	9
28.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64.7	23.5	11.8	52.9	22	4.8	29	23.5	11.8	64.7	-41.2	41	3.0	41
29.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0.6	17.6	11.8	58.8	18	5.1	22	47.1	11.8	41.2	5.9	11	3.8	13
30.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6.5	17.6	5.9	70.6	11	5.3	12	35.3	23.5	41.2	-5.9	18	3.6	20
31.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64.7	17.6	17.6	47.1	27	5.1	19	35.3	29.4	35.3	0.0	13	3.8	13
32.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70.6	17.6	11.8	58.8	18	5.2	14	41.2	23.5	35.3	5.9	9	3.9	12
3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5.3	41.2	23.5	11.8	36	4.0	38	23.5	29.4	47.1	-23.5	35	3.5	31
3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76.5	17.6	5.9	70.6	11	5.4	8	23.5	29.4	47.1	-23.5	35	3.6	24
35.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64.7	17.6	17.6	47.1	27	5.3	12	35.3	17.6	47.1	-11.8	24	3.7	18
36.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82.4	5.9	11.8	70.6	8	5.5	7	58.8	5.9	35.3	23.5	2	4.1	5
37.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76.5	11.8	11.8	64.7	14	5.2	16	47.1	23.5	29.4	17.6	4	4.0	9
38. 북한 비핵화 추진	58.8	23.5	17.6	41.2	31	5.1	22	52.9	5.9	41.2	11.8	7	4.1	5
39.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64.7	23.5	11.8	52.9	22	5.1	22	23.5	41.2	35.3	-11.8	24	3.5	29
40.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70.6	23.5	5.9	64.7	16	5.4	10	23.5	23.5	52.9	-29.4	38	3.2	40
41.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58.8	23.5	17.6	41.2	31	4.7	31	41.2	35.3	23.5	17.6	3	4.2	4
42.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58.8	29.4	11.8	47.1	27	5.0	26	35.3	35.3	29.4	5.9	10	3.8	16

주: 평균은 '매우 중요' 7점,, '보통' 4점,, '전혀 중요치 않음'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3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여당: 수행 1.7, 중요도 1.74
야당: 수행 -0.3, 중요도 0.93

- 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 여당: 42개 정책과제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함. 정책의 중요도와 현 정부의 수행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r = 0.79$)
 - 중요도가 높고, 수행도도 가장 높은 정책: 탈원전정책 폐기(1);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12)
 - 중요도도 낮고, 수행도도 낮은 정책: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3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24);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33)
 - 중요하지만, 수행도가 낮은 정책: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7);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29)
- 야당: 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대체로 공감. 그러나 정책수행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음. 중요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r = 0.03$)
 -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높은 정책: 탈원전정책 폐기(1),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2), 한미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41)
 - 중요하지만 수행도가 낮은 정책: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강화(10), 국격에 알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4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23)
 - 중요하고 수행도 높은 정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25);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12)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 여당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17)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4.1	0.0	5.9	88.2	4	1.7	1	94.1	5.9	0.0	94.1	4	1.6	2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100.0	0.0	0.0	100.0	1	2.0	6	94.1	5.9	0.0	94.1	4	1.9	6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00.0	0.0	0.0	100.0	1	2.0	6	88.2	11.8	0.0	88.2	8	2.3	10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94.1	0.0	5.9	88.2	4	1.9	5	100.0	0.0	0.0	100.0	1	1.6	1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94.1	0.0	5.9	88.2	4	1.8	2	94.1	5.9	0.0	94.1	4	1.8	3
6. 공교육 내실화	88.2	5.9	5.9	82.4	10	2.2	9	70.6	23.5	5.9	64.7	16	2.8	17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88.2	11.8	0.0	88.2	4	2.5	12	76.5	11.8	11.8	64.7	13	2.5	12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82.4	17.6	0.0	82.4	8	2.2	11	94.1	5.9	0.0	94.1	4	2.0	7
9.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88.2	0.0	11.8	76.5	14	2.7	15	88.2	11.8	0.0	88.2	8	2.4	11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82.4	17.6	0.0	82.4	9	2.1	8	88.2	11.8	0.0	88.2	8	1.8	4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94.1	5.9	0.0	94.1	3	1.8	3	100.0	0.0	0.0	100.0	1	1.8	4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82.4	17.6	0.0	82.4	8	2.2	9	88.2	11.8	0.0	88.2	8	2.0	7
13. 소득 불평등 축소	82.4	11.8	5.9	76.5	13	2.8	16	76.5	17.6	5.9	70.6	12	2.7	16
14.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70.6	23.5	5.9	64.7	17	2.8	16	76.5	11.8	11.8	64.7	13	2.6	14
1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88.2	5.9	5.9	82.4	10	1.8	3	82.4	11.8	5.9	76.5	11	2.2	9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82.4	5.9	11.8	70.6	15	2.5	12	64.7	35.3	0.0	64.7	16	2.5	13
17.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76.5	17.6	5.9	70.6	16	2.6	14	70.6	17.6	11.8	58.8	18	2.8	17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41.2	29.4	29.4	11.8	20	3.6	20	58.8	17.6	23.5	35.3	20	3.2	20
19. 이민정책 체계화	58.8	35.3	5.9	52.9	18	2.8	16	70.6	23.5	5.9	64.7	16	2.6	15
20. 선거제도 개혁	58.8	17.6	23.5	35.3	19	3.1	19	70.6	11.8	17.6	52.9	19	2.9	19

주: 평균은 '매우 중요' 7점, '보통' 4점, '전혀 중요치 않음'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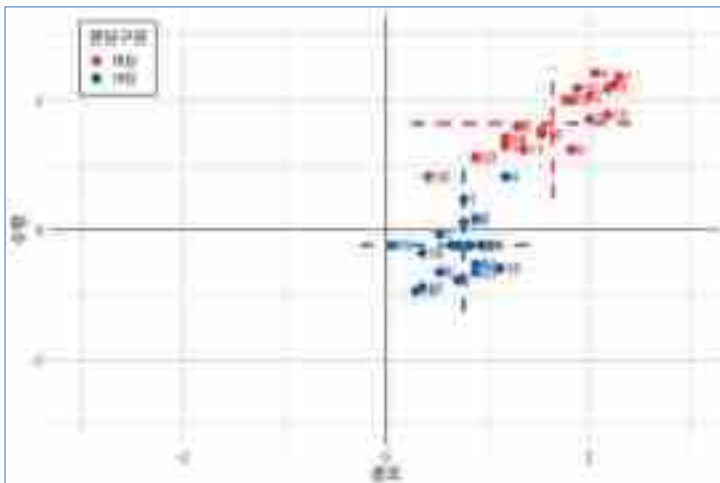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 야당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17)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70.6	5.9	23.5	47.1	2	3.2	2	47.1	17.6	35.3	11.8	2	3.5	2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64.7	5.9	29.4	35.3	13	3.3	13	35.3	11.8	52.9	-17.6	15	4.8	18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70.6	0.0	29.4	41.2	7	3.1	7	52.9	5.9	41.2	11.8	2	3.8	3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58.8	29.4	11.8	47.1	2	2.8	2	52.9	29.4	17.6	35.3	1	3.2	1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70.6	0.0	29.4	41.2	7	3.1	7	41.2	11.8	47.1	-5.9	5	4.2	6
6. 공교육 내실화	58.8	17.6	23.5	35.3	10	3.1	10	29.4	23.5	47.1	-17.6	14	4.5	13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58.8	17.6	23.5	35.3	10	3.5	10	41.2	11.8	47.1	-5.9	5	4.1	5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58.8	11.8	29.4	29.4	16	3.5	16	41.2	11.8	47.1	-5.9	5	4.6	16
9.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70.6	5.9	23.5	47.1	2	3.3	2	41.2	11.8	47.1	-5.9	5	4.2	6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64.7	5.9	29.4	35.3	13	3.2	13	41.2	11.8	47.1	-5.9	5	4.2	6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64.7	17.6	17.6	47.1	2	3.2	2	52.9	5.9	41.2	11.8	2	3.9	4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52.9	17.6	29.4	23.5	17	3.6	17	23.5	29.4	47.1	-23.5	17	4.9	19
13. 소득 불평등 축소	70.6	5.9	23.5	47.1	2	3.1	2	41.2	5.9	52.9	-11.8	10	4.2	6
14.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58.8	17.6	23.5	35.3	10	3.1	10	41.2	5.9	52.9	-11.8	10	4.5	13
15. 여아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70.6	0.0	29.4	41.2	7	2.9	7	29.4	17.6	52.9	-23.5	18	4.6	15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35.3	41.2	23.5	11.8	19	3.9	19	17.6	52.9	29.4	-11.8	10	4.2	6
17.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52.9	17.6	29.4	23.5	17	3.4	17	35.3	11.8	52.9	-17.6	15	4.2	6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41.2	23.5	35.3	5.9	20	3.7	20	11.8	17.6	70.6	-58.8	20	4.9	20
19. 이민정책 체계화	52.9	23.5	23.5	29.4	15	3.6	15	35.3	17.6	47.1	-11.8	10	4.4	12
20. 선거제도 개혁	70.6	11.8	17.6	52.9	1	3.1	1	23.5	11.8	64.7	-41.2	19	4.6	16

주: 평균은 '매우 중요' 7점,, '보통' 4점,, '전혀 중요치 않음'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 3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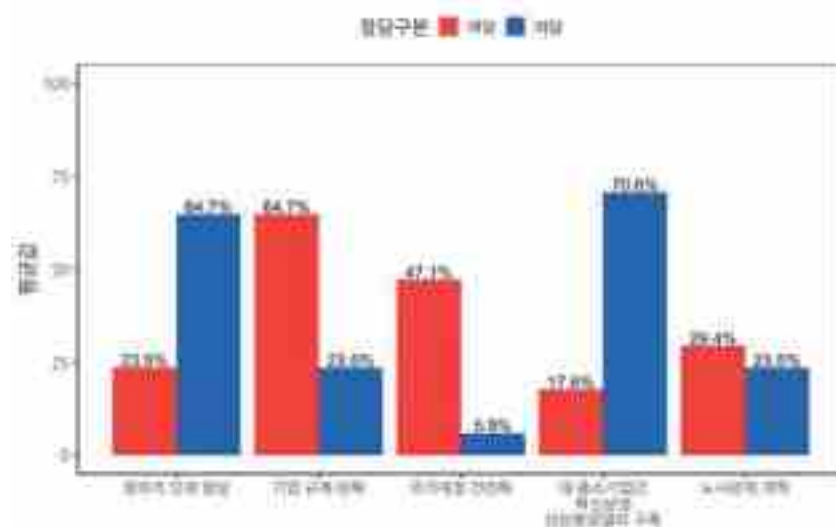
여당: 수행 1.7, 중요도 1.64
야당: 수행 -0.29, 중요도 0.71

- 여전히 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 여당,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 정부 추진정책에서의 중요한 정도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 ($r = 0.86$)
 -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행도가 낮은 이슈: 공교육 내실화 (6)
- 야당의 경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r = 0.38$). 20개 이슈가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나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이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4)
 -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정책: 여아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15), 선거제도 개혁 (20), 성차별·성폭력 없는 사회 실현 (14), 공교육 내실화 (6)
 -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높은 이슈: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7)
- 정치관련 이슈에 대한 평가
 - 여아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15):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 현 정부의 수행도에 대해서 다른 평가
 -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12): 야당의원들에게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오히려 여당의원들의 우선순위가 높음. 수행도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
 - 국회 개혁 (18): 여야 의원 모두 개인적인 차원이나 정책 수행도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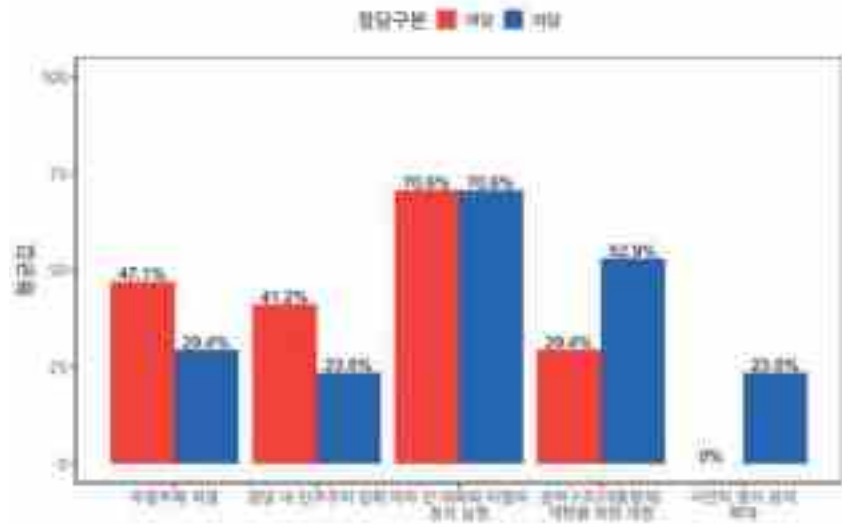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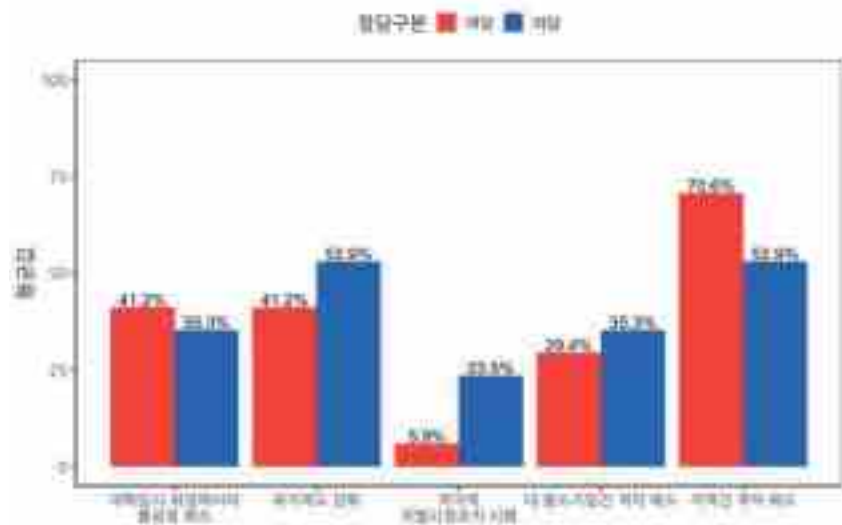
경제의 저성장 극복



정치의 민주주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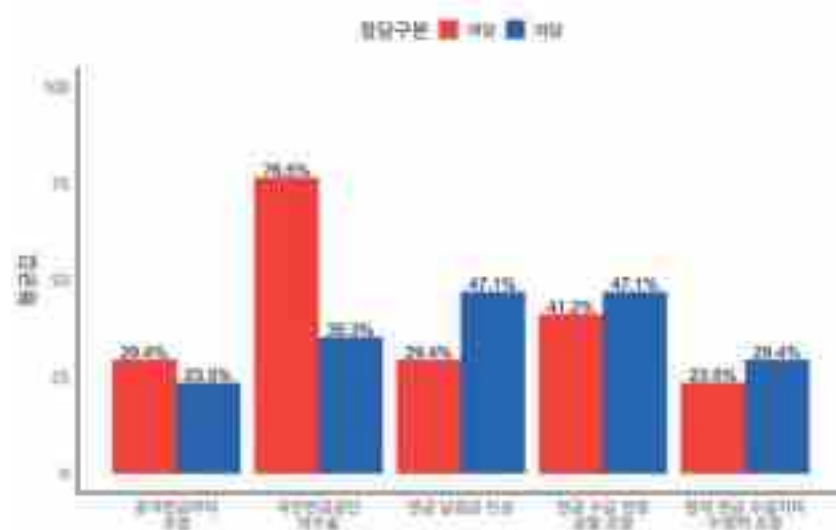
사회 불평등 완화



노동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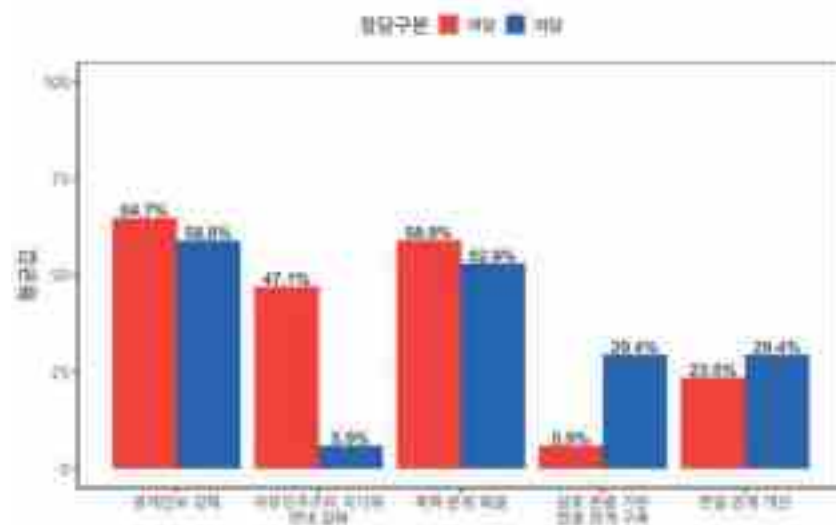
연금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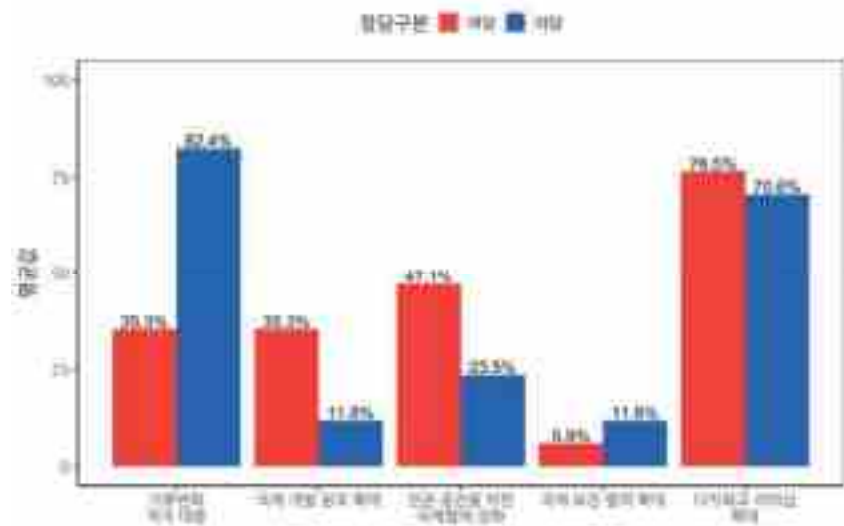
교육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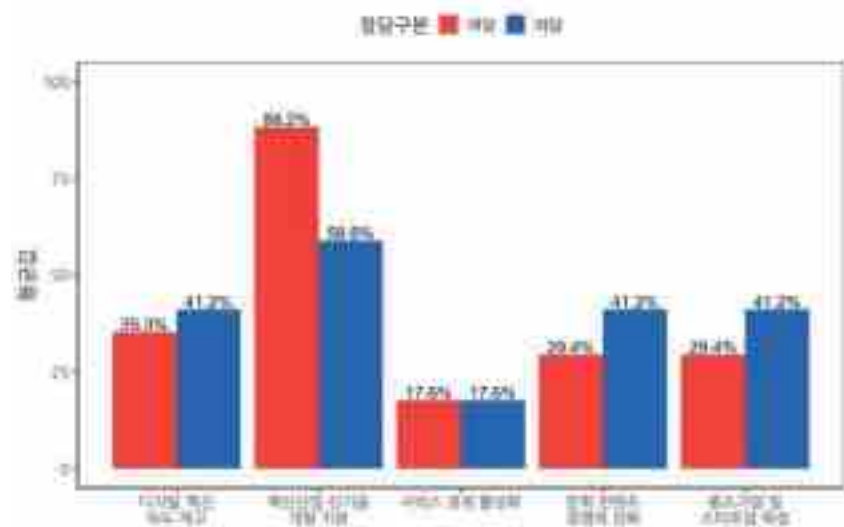
외교안보 정책 추진



국제협력 강화



핵심전략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변동 평가



Ⅲ. 기업인 조사 결과 분석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국경영학회)

윤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한 평가_기업인

귀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음 사항이 어떻게 바뀐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좋아졌다	② 좋아졌 다	③ 약간 좋아진 편 이다	④ 그대로 다	⑤ 약간 나빠진 편 이다	⑥ 나빠졌 다	⑦ 크게 나빠졌다	①+②+③ 좋아졌음	⑤+⑥+⑦ 나빠졌음	①+②+③-⑤+⑥+⑦ (좋아졌음-나빠졌음)	(평균) 점
		%	%	%	%	%	%	%	%	%	%	
자유의 신장	(100)	7.0	12.0	9.0	18.0	12.0	11.0	31.0	28.0	54.0	-26.0	(3.27)
경제적 규제 완화	(100)	2.0	13.0	17.0	36.0	7.0	11.0	14.0	32.0	32.0	0.0	(3.78)
국가 안보 강화	(100)	10.0	9.0	9.0	9.0	16.0	16.0	31.0	28.0	63.0	-35.0	(3.16)
정치적 양극화 해소	(100)	1.0	0.0	5.0	16.0	10.0	25.0	43.0	6.0	78.0	-72.0	(2.19)
국제협력 강화	(100)	3.0	8.0	12.0	23.0	8.0	17.0	29.0	23.0	54.0	-31.0	(3.08)
보호무역 대응	(100)	2.0	5.0	14.0	29.0	8.0	18.0	24.0	21.0	50.0	-29.0	(3.14)
미래혁신산업 성장	(100)	1.0	7.0	16.0	39.0	11.0	10.0	16.0	24.0	37.0	-13.0	(3.54)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 기업인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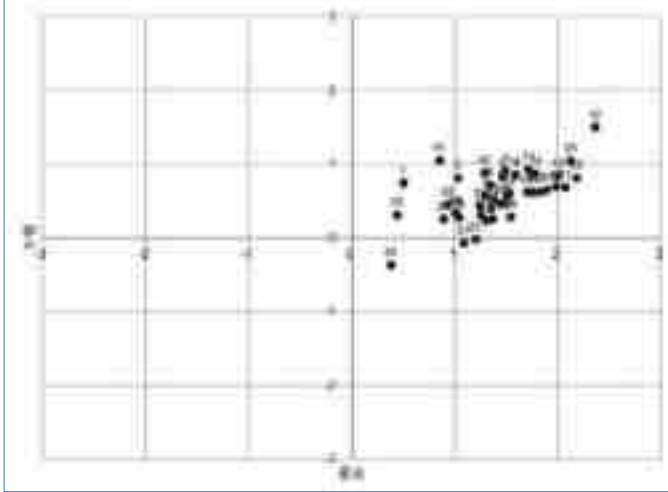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55.0	11.0	34.0	21.0	42	(4.50)	40	64.0	11.0	25.0	39.0	11	(4.74)	14
2.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63.0	17.0	20.0	43.0	39	(5.03)	34	61.0	12.0	27.0	34.0	14	(4.81)	12
3.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83.0	8.0	9.0	74.0	13	(5.82)	8	55.0	17.0	28.0	27.0	23	(4.62)	19
4.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76.0	10.0	14.0	62.0	28	(5.49)	18	59.0	25.0	16.0	43.0	7	(4.91)	5
5.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70.0	25.0	5.0	65.0	23	(5.46)	20	60.0	22.0	18.0	42.0	8	(4.83)	10
6.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69.0	19.0	12.0	57.0	31	(5.34)	25	58.0	19.0	23.0	35.0	13	(4.71)	15
7.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70.0	21.0	9.0	61.0	29	(5.29)	27	52.0	26.0	22.0	30.0	21	(4.58)	23
8.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75.0	13.0	12.0	63.0	25	(5.49)	18	54.0	19.0	27.0	27.0	23	(4.47)	26
9.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83.0	7.0	10.0	73.0	16	(5.59)	13	59.0	22.0	19.0	40.0	10	(4.84)	9
10.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88.0	5.0	7.0	81.0	8	(6.00)	5	68.0	11.0	21.0	47.0	3	(4.83)	10
11.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73.0	20.0	7.0	66.0	20	(5.59)	13	60.0	25.0	15.0	45.0	5	(4.85)	8
12.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97.0	2.0	1.0	96.0	1	(6.36)	1	78.0	9.0	13.0	65.0	1	(5.50)	1
13.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82.0	14.0	4.0	78.0	10	(5.71)	11	64.0	18.0	18.0	46.0	4	(4.93)	4
14.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85.0	10.0	5.0	80.0	9	(5.78)	9	63.0	19.0	18.0	45.0	5	(4.87)	7
15.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원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72.0	22.0	6.0	66.0	20	(5.25)	29	45.0	28.0	27.0	18.0	33	(4.31)	33
16.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87.0	11.0	2.0	85.0	5	(5.98)	6	54.0	20.0	26.0	28.0	22	(4.69)	16
17.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80.0	14.0	6.0	74.0	13	(5.53)	16	55.0	22.0	23.0	32.0	17	(4.60)	22
1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57.0	32.0	11.0	46.0	36	(5.00)	36	44.0	29.0	27.0	17.0	34	(4.33)	31
19.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72.0	19.0	9.0	63.0	25	(5.31)	26	44.0	28.0	28.0	16.0	36	(4.23)	39
20.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76.0	18.0	6.0	70.0	17	(5.44)	21	54.0	17.0	29.0	25.0	26	(4.46)	27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66.0	22.0	12.0	54.0	33	(5.09)	32	45.0	17.0	38.0	7.0	41	(3.93)	41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 기업인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22.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81.0	15.0	4.0	77.0	11	(5.51)	17	59.0	15.0	26.0	33.0	16	(4.56)	24
23.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71.0	21.0	8.0	63.0	25	(5.20)	31	42.0	24.0	34.0	8.0	40	(3.98)	40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48.0	34.0	18.0	30.0	40	(4.38)	42	31.0	28.0	41.0	-10.0	42	(3.63)	42
2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9.0	7.0	4.0	85.0	5	(6.12)	3	61.0	20.0	19.0	42.0	8	(5.04)	3
26.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94.0	6.0	0.0	94.0	2	(6.18)	2	57.0	18.0	25.0	32.0	17	(4.81)	12
27.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89.0	11.0	0.0	89.0	3	(6.07)	4	57.0	13.0	30.0	27.0	23	(4.68)	17
28.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79.0	16.0	5.0	74.0	13	(5.54)	15	45.0	19.0	36.0	9.0	39	(4.28)	35
29.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85.0	12.0	3.0	82.0	7	(5.70)	12	57.0	17.0	26.0	31.0	20	(4.62)	19
30.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89.0	9.0	2.0	87.0	4	(5.89)	7	57.0	20.0	23.0	34.0	14	(4.65)	18
31.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66.0	26.0	8.0	58.0	30	(5.24)	30	50.0	21.0	29.0	21.0	30	(4.43)	29
32.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64.0	23.0	13.0	51.0	34	(4.93)	37	48.0	28.0	24.0	24.0	27	(4.45)	28
3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48.0	32.0	20.0	28.0	41	(4.44)	41	46.0	32.0	22.0	24.0	27	(4.31)	33
3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60.0	26.0	14.0	46.0	36	(4.89)	38	47.0	25.0	28.0	19.0	32	(4.25)	37
35.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74.0	18.0	8.0	66.0	20	(5.37)	23	44.0	26.0	30.0	14.0	37	(4.25)	37
36.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67.0	22.0	11.0	56.0	32	(5.04)	33	47.0	20.0	33.0	14.0	37	(4.27)	36
37.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78.0	14.0	8.0	70.0	17	(5.38)	22	51.0	21.0	28.0	23.0	29	(4.51)	25
38. 북한 비핵화 추진	63.0	22.0	15.0	48.0	35	(5.02)	35	53.0	11.0	36.0	17.0	34	(4.32)	32
39.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81.0	15.0	4.0	77.0	11	(5.75)	10	60.0	12.0	28.0	32.0	17	(4.62)	19
40.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75.0	17.0	8.0	67.0	19	(5.35)	24	50.0	21.0	29.0	21.0	30	(4.39)	30
41.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61.0	23.0	16.0	45.0	38	(4.85)	39	65.0	19.0	16.0	49.0	2	(5.05)	2
42. 첨단전략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73.0	19.0	8.0	65.0	23	(5.29)	27	61.0	17.0	22.0	39.0	11	(4.88)	6

주: 평균은 '매우 중요' 7점,, '보통' 4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기업인: 수행 0.57 중요도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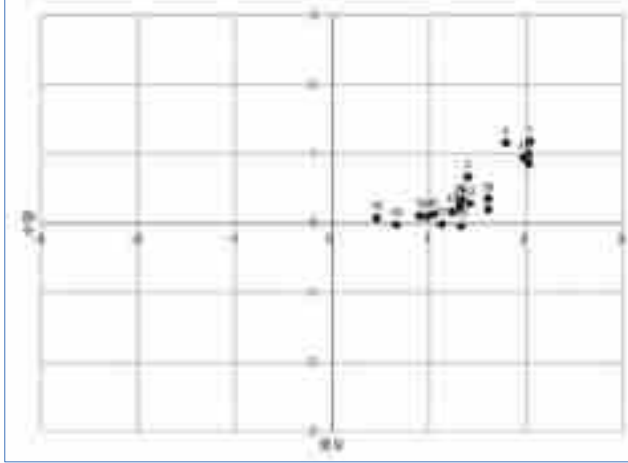
- 기업인 응답자: 윤정부의 42개 정책에 대해 평균 중요도는 1.41, 수행도는 0.57로 평가하여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정책: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기업 및 산업환경 공정성 및 시장환경 안정 등 기업 측면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수행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사회 안전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음
- 중요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행도가 낮은 정책: 미디어의 공정·공공성 확립 및 신뢰회복,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자율과 창의 중심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 상대적으로 중요도 평가는 낮으나 높은 수행도를 보이는 정책: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로 해당 정책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윤정부의 수행도도 높은 긍정적인 평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타 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여줌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 기업인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100)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91.0	3.0	6.0	85.0	1	(6.04)	1	66.0	17.0	17.0	49.0	1	(5.18)	1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88.0	7.0	5.0	83.0	2	(6.03)	2	65.0	12.0	23.0	42.0	3	(4.86)	5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76.0	13.0	11.0	65.0	9	(5.40)	9	49.0	33.0	18.0	31.0	6	(4.67)	6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82.0	12.0	6.0	76.0	5	(5.79)	5	63.0	23.0	14.0	49.0	1	(5.16)	2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86.0	5.0	9.0	77.0	4	(6.02)	3	62.0	12.0	26.0	36.0	5	(4.99)	3
6. 공교육 내실화	82.0	11.0	7.0	75.0	6	(5.61)	6	44.0	22.0	34.0	10.0	12	(4.20)	12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62.0	25.0	13.0	49.0	17	(4.90)	18	42.0	24.0	34.0	8.0	15	(4.11)	15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74.0	18.0	8.0	66.0	8	(5.34)	10	52.0	19.0	29.0	23.0	7	(4.34)	8
9.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71.0	18.0	11.0	60.0	13	(5.05)	16	44.0	21.0	35.0	9.0	14	(4.13)	14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68.0	15.0	17.0	51.0	16	(5.24)	14	46.0	19.0	35.0	11.0	11	(4.17)	13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86.0	7.0	7.0	79.0	3	(5.97)	4	61.0	18.0	21.0	40.0	4	(4.94)	4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72.0	17.0	11.0	61.0	12	(5.42)	8	47.0	16.0	37.0	10.0	12	(4.28)	10
13. 소득 불평등 축소	75.0	13.0	12.0	63.0	10	(5.32)	12	48.0	16.0	36.0	12.0	10	(4.23)	11
14.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76.0	11.0	13.0	63.0	10	(5.32)	12	49.0	18.0	33.0	16.0	8	(4.31)	9
1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71.0	15.0	14.0	57.0	14	(5.33)	11	45.0	14.0	41.0	4.0	18	(3.96)	20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47.0	34.0	19.0	28.0	20	(4.46)	20	42.0	20.0	38.0	4.0	18	(4.08)	17
17.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65.0	22.0	13.0	52.0	15	(5.13)	15	45.0	16.0	39.0	6.0	16	(3.99)	18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78.0	13.0	9.0	69.0	7	(5.61)	6	47.0	19.0	34.0	13.0	9	(4.35)	7
19. 이민정책 체계화	55.0	28.0	17.0	38.0	19	(4.66)	19	41.0	20.0	39.0	2.0	20	(3.98)	19
20. 선거제도 개혁	57.0	31.0	12.0	45.0	45	(4.98)	17	43.0	20.0	37.0	6.0	16	(4.10)	16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기업인: 수행 0.40 중요도 1.38

- 기업인 응답자: 20개 제안 정책에 대해 평균 중요도는 1.38, 수행도는 0.40로 평가하여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정책: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등도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이자 수행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중요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행도가 낮은 정책: 국회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공교육 내실화, 효과적인 대북정책
- 그외 소득 불평등 축소, 성평등 사회 실현 등에 대해서도 수행도에 비해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기업인들은 경제 구조 효율화와 사회 안정과 미래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추진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_기업인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평균) 점
사례수	%	%	%	%	%	%	
정치 분야	(100)	1.0	8.0	34.0	57.0	9.0	91.0 (1.53)
외교·안보 분야	(100)	4.0	21.0	46.0	29.0	25.0	75.0 (2.00)
경제 분야	(100)	1.0	20.0	50.0	29.0	21.0	79.0 (1.93)
기업 분야	(100)	2.0	40.0	40.0	18.0	42.0	58.0 (2.26)
사회 분야	(100)	0.0	23.0	54.0	23.0	23.0	77.0 (2.00)
문화·교육 분야	(100)	4.0	35.0	50.0	11.0	39.0	61.0 (2.32)

IV. 사회과학자 조사 결과 분석

설동훈 (전북대학교, 한국사회학회)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 분야만 긍정적 평가, 다른 분야에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음

- 기업 분야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약간 우위
- 문화·교육 분야,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 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음

○ 여섯 분야 간 상대적 비교

- 기업 분야 > 문화·교육 분야 > 외교·안보 분야 > 경제 분야 > 사회 분야 > 정치 분야
- 3월 조사와 10월 조사 비교: (1) 여섯 개 분야의 순서 동일. (2) 기업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점수 상승. 특히, 기업 분야에서는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더 많음. (3)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문화·교육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점수 하락.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훨씬 큼.

현재 대한민국은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 (1)

(단위: %, 점수; N=636)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 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 그 렇다	③+④ 그 렇지 않 다	계	평균 점
		%	%	%	%	%	%	%	
정치 분야	(636)	4.1	12.6	30.0	53.3	16.7	83.3	100.0	(1.67)
외교·안보 분야	(636)	11.5	26.4	32.2	29.9	37.9	62.1	100.0	(2.19)
경제 분야	(636)	5.5	29.7	41.0	23.7	35.2	64.8	100.0	(2.17)
기업 분야	(636)	6.9	44.0	37.7	11.3	50.9	49.1	100.0	(2.47)
사회 분야	(636)	2.5	25.9	47.0	24.5	28.5	71.5	100.0	(2.06)
문화·교육 분야	(636)	3.5	34.7	41.4	20.4	38.2	61.8	100.0	(2.21)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현재 대한민국은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 (2)

(단위: %, %p, 점수)

구분	3월 조사 (N=1086)				10월 조사 (N=636)			
	긍정 ①+②	부정 ③+④	긍정 -부정	(평균)	긍정 ①+②	부정 ③+④	긍정 -부정	(평균)
정치 분야	17.5	82.5	-65.0	(1.86)	16.7	83.3	-66.6	(1.67)
외교·안보 분야	38.2	61.8	-23.6	(2.25)	37.9	62.1	-24.2	(2.19)
경제 분야	32.7	67.3	-34.6	(2.16)	35.2	64.8	-29.6	(2.17)
기업 분야	41.5	58.5	-16.9	(2.29)	50.9	49.1	1.8	(2.47)
사회 분야	29.7	70.3	-40.7	(2.15)	28.5	71.5	-43.0	(2.06)
문화·교육 분야	39.3	60.7	-21.4	(2.29)	38.2	61.8	-23.6	(2.21)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42개 주요 국정과제의 중요도-수행도 평가

□ 중요도 importance 평가

-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총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경영·정치·사회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 42개를 추렸습니다. (1) 귀하는 다음 각 정책과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중요도 지수 1’과 ‘중요도 지수 2’로 평가: 전자는 중요 – 보통 – 중요하지 않음의 분포에 주목; 후자는 중요한 정도를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평균 산출

○ 중요도 지수 1. 상위 13개 정책과제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중요도 지수 2. 상위 13개 정책과제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42개 주요 국정과제의 중요도-수행도 평가

□ 수행도 performance 평가

-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총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경영·정치·사회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 42개를 추렸습니다. (2) 정부는 다음 각 정책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수행도 지수 1’과 ‘수행도 지수 2’로 평가: 전자는 매우 중요하게 여김 – 보통 –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의 분포에 주목; 후자는 중요한 정도를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평균 산출

○ 수행도 지수 1. 상위 13개 정책과제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수행도 지수 2. 상위 13개 정책과제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북한 비핵화 추진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636)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63.4	9.4	27.2	36.2	42	(4.84)	41	71.2	11.6	17.1	54.1	3	(5.27)	3
2.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72.0	17.1	10.8	61.2	32	(5.41)	24	65.6	16.0	18.4	47.2	5	(5.00)	5
3.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79.4	12.4	8.2	71.2	21	(5.80)	7	58.0	17.3	24.7	33.3	18	(4.73)	16
4.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73.3	12.1	14.6	58.6	36	(5.44)	22	61.8	19.2	19.0	42.8	7	(4.91)	7
5.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76.4	13.4	10.2	66.2	28	(5.45)	21	61.9	18.1	20.0	42.0	8	(4.87)	10
6.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73.0	12.9	14.2	58.8	35	(5.35)	32	60.2	18.6	21.2	39.0	11	(4.80)	11
7.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65.4	21.9	12.7	52.7	38	(5.04)	39	55.0	23.7	21.2	33.8	17	(4.60)	19
8.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75.3	13.7	11.0	64.3	30	(5.47)	19	55.7	14.3	30.0	25.6	24	(4.41)	27
9.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72.3	12.6	15.1	57.2	37	(5.30)	35	57.9	22.2	20.0	37.9	13	(4.80)	12
10.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90.1	5.3	4.6	85.5	3	(6.05)	2	64.3	14.8	20.9	43.4	6	(4.91)	6
11.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82.9	11.5	5.7	77.2	10	(5.69)	12	61.0	19.7	19.3	41.7	10	(4.88)	9
12.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92.9	4.2	2.8	90.1	1	(6.18)	1	71.4	14.2	14.5	56.9	2	(5.28)	2
13.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82.4	10.7	6.9	75.5	14	(5.55)	15	57.1	20.0	23.0	34.1	16	(4.65)	18
14.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83.8	8.3	7.9	75.9	12	(5.74)	8	59.9	14.9	25.2	34.7	14	(4.74)	15
15.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연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76.7	16.4	6.9	69.8	22	(5.33)	33	49.7	24.5	25.8	23.9	26	(4.42)	26
16.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88.1	7.7	4.2	83.8	5	(5.85)	6	54.6	15.6	29.9	24.7	25	(4.50)	23
17.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77.5	16.8	5.7	71.9	18	(5.32)	34	50.9	24.4	24.7	26.3	22	(4.43)	24
1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74.7	17.6	7.7	67.0	26	(5.36)	30	50.6	19.0	30.3	20.3	31	(4.30)	34
19.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74.8	19.0	6.1	68.7	25	(5.35)	31	47.0	21.1	31.9	15.1	37	(4.25)	35
20.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79.6	14.2	6.3	73.3	16	(5.51)	16	47.3	20.6	32.1	15.3	36	(4.20)	37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78.3	17.6	4.1	74.2	15	(5.45)	20	43.1	19.5	37.4	5.7	41	(3.99)	41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정	순위	(평균)	순위
22.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81.9	13.5	4.6	77.4	9	(5.59)	13	51.6	15.6	32.9	18.7	32	(4.31)	33
23.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78.8	13.8	7.4	71.4	20	(5.50)	17	46.9	15.6	37.6	9.3	39	(4.04)	40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54.1	28.3	17.6	36.5	41	(4.63)	42	34.3	25.2	40.6	-6.3	42	(3.75)	42
2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5.4	11.3	3.3	82.1	7	(5.93)	5	62.3	17.1	20.6	41.7	9	(4.90)	8
26.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90.1	7.5	2.4	87.7	2	(6.01)	3	55.0	15.9	29.1	25.9	23	(4.52)	22
27.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84.3	12.1	3.6	80.7	8	(5.72)	10	50.0	17.0	33.0	17.0	33	(4.34)	31
28.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75.6	17.9	6.4	69.2	24	(5.36)	29	44.0	20.1	35.8	8.2	40	(4.11)	39
29.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86.0	10.5	3.5	82.5	6	(5.73)	9	54.6	17.1	28.3	26.3	21	(4.56)	20
30.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88.5	8.2	3.3	85.2	4	(5.93)	4	52.0	17.6	30.3	21.7	27	(4.43)	25
31.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71.9	17.0	11.2	60.7	34	(5.17)	38	53.3	22.5	24.2	29.1	20	(4.52)	21
32.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65.4	17.8	16.8	48.6	40	(4.88)	40	57.1	23.7	19.2	37.9	12	(4.76)	14
3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75.5	14.6	9.9	65.6	29	(5.39)	27	47.3	21.4	31.3	16.0	35	(4.33)	32
3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71.7	17.8	10.5	61.2	33	(5.21)	37	45.0	20.3	34.7	10.2	38	(4.11)	38
35.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80.2	12.6	7.2	73.0	17	(5.47)	18	49.4	18.1	32.5	16.8	34	(4.22)	36
36. 청년에게 주거·일자·교육 등 맞춤형 지원	77.4	16.7	6.0	71.4	19	(5.42)	23	50.9	18.6	30.5	20.4	30	(4.36)	29
37.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81.8	12.3	6.0	75.8	13	(5.58)	14	52.0	16.4	31.6	20.4	29	(4.37)	28
38. 북한 비핵화 추진	65.4	18.7	15.9	49.5	39	(5.24)	36	58.8	17.1	24.1	34.7	15	(4.77)	13
39.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82.2	11.8	6.0	76.3	11	(5.71)	11	57.5	15.3	27.2	30.3	19	(4.67)	17
40.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76.6	16.4	7.1	69.5	23	(5.40)	25	52.7	16.2	31.1	21.5	28	(4.35)	30
41.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72.8	15.7	11.5	61.3	31	(5.40)	26	72.6	13.2	14.2	58.5	1	(5.34)	1
42. 첨단전략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74.8	17.1	8.0	66.8	27	(5.37)	28	67.1	17.8	15.1	52.0	4	(5.08)	4

주: 평균은 '매우 중요' 7점, '.....', '보통' 4점, '.....',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7점, '.....', '보통' 4점, '.....',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42개 주요 국정과제의 중요도-수행도 분석

□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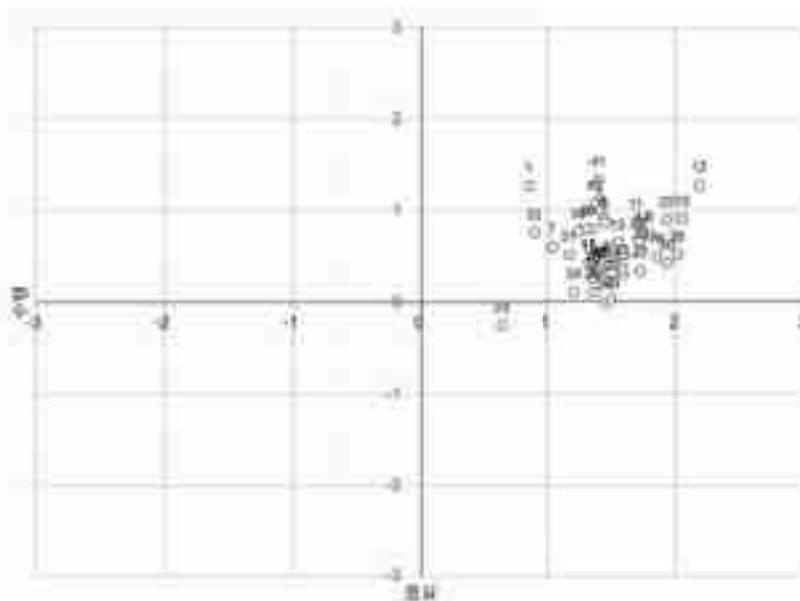
○ 원점(0, 0) 교차 기준: 긍정-부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장점

- 권장 영역 (중요도 높고, 수행도 높음): 40개 국정과제
- 긴급개선 영역 (중요도 높으나, 수행도 낮음): 2개 국정과제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차별화 영역 (중요도 낮으나, 수행도 높음): 없음
-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 낮고, 수행도 낮음): 없음

○ 평균(1.48, 0.57) 교차 기준: 42개 국정과제의 상대적 위치 파악 가능

- 권장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높고, 수행도 상대적으로 높음): 8개 국정과제 (12.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2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1.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 전략, 3, 14, 39, 13)
- 긴급개선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수행도 상대적으로 낮음): 9개 국정과제 (26.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16.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9.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0.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27, 37, 22, 20, 23)
- 차별화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행도 상대적으로 높음): 11개 국정과제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41.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2.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2.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4, 5, 6, 9, 38, 32, 7)
-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행도 상대적으로 낮음): 14개 국정과제 (31.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17.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5.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40, 8, 33, 36, 36, 34, 19, 26, 21, 24)
- ○ 대각선(기울기 1) 교차 기준: 대각선 위쪽은 중요도보다 수행도가 높고, 아래쪽은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낮음
- 위쪽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더 높음): 1개 국정과제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아래쪽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음): 41개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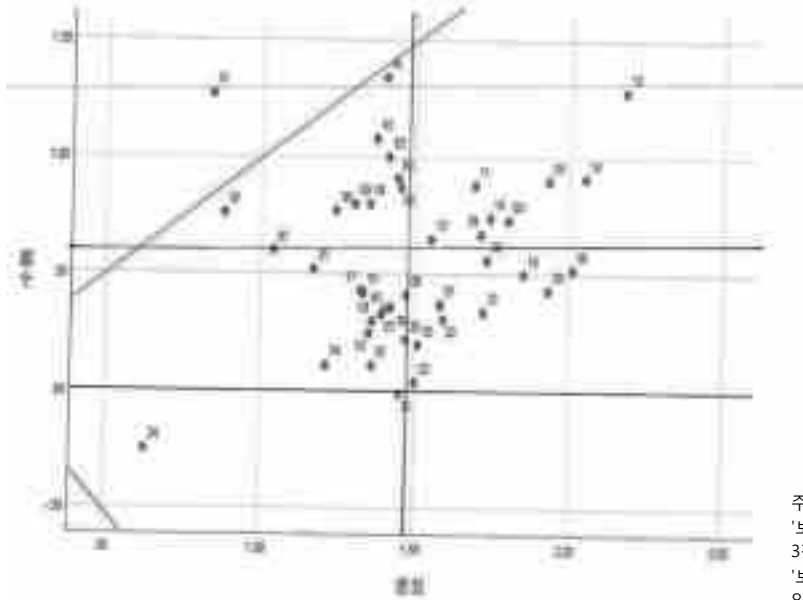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3)



사회과학자 (42개 정책 평균: 수행 0.57, 중요 1.48)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4)



사회과학자 (42개 정책 평균: 수행 0.57, 중요 1.48)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20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수행도 평가

□ 중요도 importance 평가

- “다음은 지난 3월 조사에서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꼽은 상위 10개 정책과제, 그리고 차순위 30개 과제 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10개 정책과제'를 골랐습니다. (1) 귀하는 다음 각 정책과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중요도 지수 1'과 '중요도 지수 2'로 평가: 전자는 중요 - 보통 - 중요하지 않음의 분포에 주목; 후자는 중요한 정도를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평균 산출

○ 중요도 지수 1. 상위 13개 정책과제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13. 소득 불평등 축소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6. 공교육 내실화
9.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 중요도 지수 2. 상위 13개 정책과제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6. 공교육 내실화
13. 소득 불평등 축소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20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수행도 평가

□ 수행도 performance 평가

- “다음은 지난 3월 조사에서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꼽은 상위 10개 정책과제, 그리고 차순위 30개 과제 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10개 정책과제’를 골랐습니다. (2) 정부는 다음 각 정책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수행도 지수 1’과 ‘수행도 지수 2’로 평가: 전자는 매우 중요하게 여김 - 보통 -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의 분포에 주목; 후자는 중요한 정도를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평균 산출

○ 수행도 지수 1. 상위 13개 정책과제	○ 수행도 지수 2. 상위 13개 정책과제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5.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5.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6. 공교육 내실화	6. 공교육 내실화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17.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19. 이민정책 체계화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단위: %, %p, 순위, 점수, 순위; N=636)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정부정책추진 평가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긍정 ① +②+③	보통	부정 ⑤ +⑥+⑦	긍정-부 정	순위	(평균)	순위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86.5	7.1	6.4	80.0	1	(5.99)	1	60.1	15.6	24.4	35.7	5	(4.83)	3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85.1	8.0	6.9	78.1	2	(5.93)	3	66.0	10.4	23.6	42.5	2	(4.94)	2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82.4	9.3	8.3	74.1	5	(5.58)	8	61.9	12.4	25.6	36.3	3	(4.76)	4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79.6	13.7	6.8	72.8	6	(5.63)	6	61.3	20.8	17.9	43.4	1	(4.97)	1
5. 출산을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84.6	6.1	9.3	75.3	4	(5.99)	2	58.0	10.5	31.4	26.6	8	(4.70)	6
6. 공교육 내실화	78.5	11.3	10.2	68.2	10	(5.56)	10	49.5	16.8	33.6	15.9	10	(4.33)	10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74.5	15.4	10.1	64.5	16	(5.30)	17	45.9	20.1	34.0	11.9	13	(4.19)	12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75.0	15.3	9.7	65.3	14	(5.26)	18	58.0	15.9	26.1	31.9	6	(4.58)	7
9.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76.6	13.8	9.6	67.0	11	(5.38)	14	46.7	17.0	36.3	10.4	14	(4.13)	15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80.5	10.5	9.0	71.5	7	(5.63)	5	51.4	15.4	33.2	18.2	9	(4.33)	9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84.4	9.0	6.6	77.8	3	(5.82)	4	60.2	15.3	24.5	35.7	4	(4.76)	5
12.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	78.9	11.6	9.4	69.5	9	(5.58)	7	57.9	13.8	28.3	29.6	7	(4.58)	8
13. 소득 불평등 축소	78.9	12.4	8.6	70.3	8	(5.54)	11	47.0	16.4	36.6	10.4	15	(4.12)	16
14. 성차별·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74.7	14.5	10.8	63.8	17	(5.36)	15	45.3	17.9	36.8	8.5	17	(4.08)	17
1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74.7	12.7	12.6	62.1	18	(5.41)	13	40.4	13.2	46.4	-6.0	20	(3.70)	20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75.0	16.5	8.5	66.5	12	(5.44)	12	45.3	22.0	32.7	12.6	11	(4.24)	11
17.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74.7	15.1	10.2	64.5	15	(5.35)	16	47.8	16.7	35.5	12.3	12	(4.13)	14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76.9	12.1	11.0	65.9	13	(5.56)	9	41.2	15.6	43.2	-2.0	18	(3.92)	18
19. 이민정책 체계화	68.7	21.4	9.9	58.8	19	(5.12)	20	43.4	23.3	33.3	10.1	16	(4.14)	13
20. 선거제도 개혁	67.8	20.3	11.9	55.8	20	(5.23)	19	37.7	21.4	40.9	-3.1	19	(3.92)	19

주: 평균은 '매우 중요' 7점,, '보통' 4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매우 중요하게 여기' 7점,, '보통' 4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20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수행도 분석

□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 원점(0, 0) 교차 기준: 긍정-부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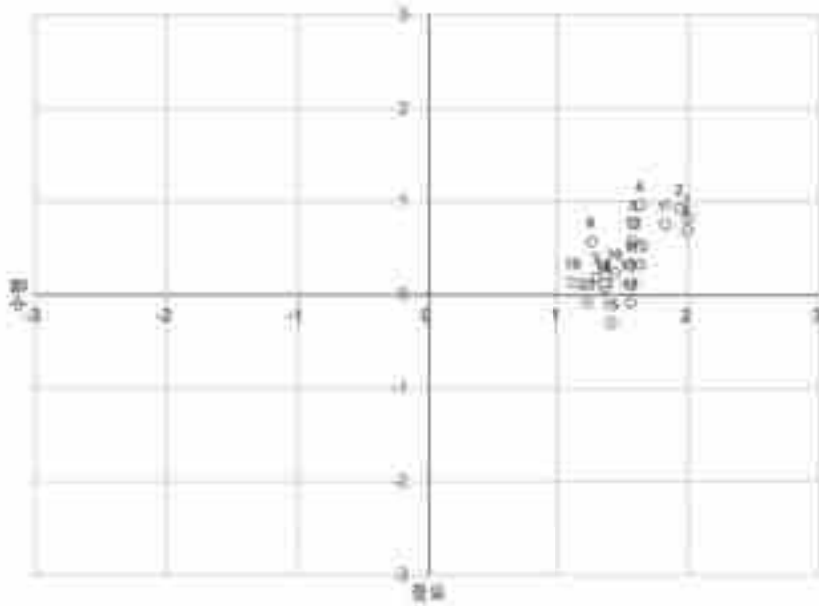
- 권장 영역 (중요도 높고, 수행도 높음): 17개 정책과제
- 긴급개선 영역 (중요도 높으나, 수행도 낮음): 3개 정책과제 (1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20. 선거제도 개혁,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 차별화 영역 (중요도 낮으나, 수행도 높음): 없음
-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 낮고, 수행도 낮음): 없음

○ 평균(1.53, 0.37) 교차 기준: 20개 정책과제의 상대적 위치 파악 가능

- 권장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높고, 수행도 상대적으로 높음): 7개 정책과제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1, 3, 12)
- 긴급개선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수행도 상대적으로 낮음): 4개 정책과제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6. 공공육 내실화, 13. 소득 불평등 축소, 18. 국회 개혁(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 차별화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행도 상대적으로 높음): 1개 정책과제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행도 상대적으로 낮음): 8개 정책과제 (16. 대학교육의 자율성 증대, 9.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17.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19, 14, 20, 15)

- ○ 대각선(기울기 1) 교차 기준: 대각선 위쪽은 중요도보다 수행도가 높고, 아래쪽은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낮음
- 위쪽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더 높음): 없음
- 아래쪽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음): 20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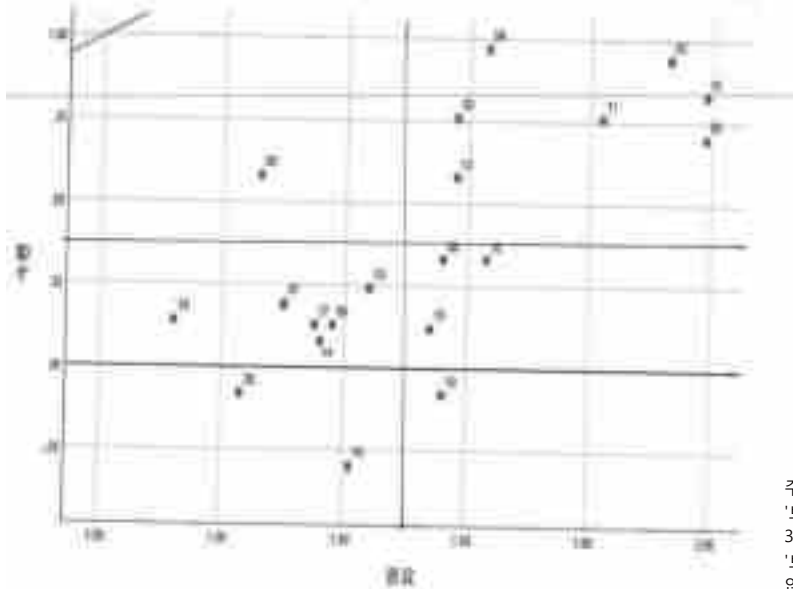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사회과학자 (20개 정책 평균: 수행 0.37, 중요 1.53)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3)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사회과학자 (20개 정책 평균: 수행 0.37, 중요 1.53)

현안 별 핵심 개혁과제: 제1순위+제2순위 (1)

(단위: %, N=636)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책	혁신적인 출산장려 정책	연금 개혁	기술혁신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확대	이민정책 체계화	기타	없다
	54.7	45.4	36.9	30.8	20.1	5.7	3.1
경제의 저성장 극복	대·중소기업간 혁신상생 선순환모델의 구축	창의적 인재 양성	기업 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국가재정 건전화	기타	없다
	50.3	46.2	36.0	32.5	27.5	2.7	2.4
정치의 민주주의 강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부정부패 척결	정당 내 민주주의 강화	권력구조(대통령제) 개편을 위한 개헌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기타	없다
	55.0	45.3	40.9	29.2	21.1	3.8	2.4
사회 불평등 완화	지역간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복지제도 강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시행	대학입시·취업에서의 불공정 해소	기타	없다
	46.1	41.7	39.5	30.7	26.9	2.0	6.6
노동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	양대 노총 기득권 철폐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완화 등)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제 완화	최저임금 차등화	기타	없다
	57.2	46.2	38.5	24.7	18.1	0.9	4.6

현안 별 핵심 개혁과제: 제1순위+제2순위 (2)

(단위: %, N=636)

연금개혁	공적연금부터 조정	국민연금공단 대수술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연금 납입금 인상	현재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 조정	기타	없다
	45.1	40.7	39.0	33.8	20.6	3.1	8.8
교육개혁	교육 기회 격차 해소	교육교부금 개혁	초중고등학교 전수 학력평가 시행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및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기타	없다
	70.0	48.3	29.1	19.5	11.8	9.4	6.0
외교안보 정책 추진	경제안보 강화	북핵 문제 해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상호 존중 기반 한중 관계 구축	한일 관계 개선	기타	없다
	63.2	40.3	33.6	32.2	20.0	4.1	3.3
국제협력 강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기후변화 적극 대응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 개발 원조 확대	국제 보건 협력 확대	기타	없다
	64.3	59.3	32.5	20.3	15.1	0.9	3.8
핵심전략산업 육성	혁신산업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혁신 속도 제고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서비스 경제 활성화	기타	없다
	71.2	42.9	33.8	28.6	17.6	0.8	2.5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사회변동 평가

☐ 한국의 사회변동 평가 (7개 영역)

• “귀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음 사항이 어떻게 바뀐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 좋아짐: 경제적 규제 완화 (31.3%p), 미래혁신산업 성장 (7.4%p), 국가 안보 강화 (1.4%p)

• ‘경제적 규제 완화’에 대하여 높이 평가

○ 나빠짐: 정치적 양극화 해소 (-49.5%p), 보호무역 대응 (-9.6%p), 자유의 신장 (-5.7%p), 국제협력 강화 (-2.0%p)

• ‘정치적 양극화 해소’는 크게 나빠진 것으로 평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변동 평가

(단위: %, %p, 점; N=636)

	① 크게 좋아졌 다 %	② 좋아 졌 다 %	③ 약간 좋아진 편이다 %	④ 그대 로 다 %	⑤ 약간 나빠진 편이다 %	⑥ 나빠 졌 다 %	⑦ 크게 나빠졌 다 %	①+②+ ③ 좋아 졌 음 %	⑤+⑥+ ⑦ 나빠 졌 음 %	(좋아졌 음-나빠 졌 음) %p	계 %	(평균) 점
자유 의 신장	7.9	15.1	14.0	20.4	6.1	16.2	20.3	36.9	42.6	-5.7	100.0	(3.68)
경제적 규제 완화	3.6	16.0	25.8	40.4	4.1	5.8	4.2	45.4	14.2	31.3	100.0	(4.40)
국가 안보 강화	15.3	15.7	13.1	13.4	11.8	13.4	17.5	44.0	42.6	1.4	100.0	(3.99)
정치적 양극화 해소	0.9	4.2	7.9	24.4	11.2	20.8	30.7	13.1	62.6	-49.5	100.0	(2.75)
국제협력 강화	6.8	17.6	16.2	16.8	10.8	15.1	16.7	40.6	42.6	-2.0	100.0	(3.81)
보호무역 대응	2.2	11.0	16.7	30.7	11.5	14.9	13.1	29.9	39.5	-9.6	100.0	(3.65)
미래혁신산업 성장	2.7	12.6	19.2	38.5	9.7	9.6	7.7	34.4	27.0	7.4	100.0	(4.00)

주: 평균은 '크게 좋아졌다' 7점,, '그대로다' 4점,, '크게 나빠졌다' 1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정부가 더욱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단

(단위: %, N=636)

	제1순위	제1순위+제2순위
청년	34.0	57.4
저소득층	27.8	53.1
노인	14.5	36.2
여성	13.5	24.4
장애인	3.8	12.4
이주민	3.8	10.1
기타	1.3	3.6
없다	1.4	1.4
계	100.0	198.6

기관 신뢰도

□ 기관 신뢰도 (20개 기관)

- “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까?”

○ 10월 조사

- 신뢰도 지수 1: 의료기관 (74.8%p) > 군대 (34.3%p) > 대기업 (33.0%p) > 교육기관 (29.6%p) > 금융기관 (15.4%p) > 중앙정부 부처 (4.1%p) > 법원 (-1.9%p) > 지방자치단체 (-6.0%p) > 대통령 (-14.2%p) > 검찰 (-17.9%p) > 종교기관 (-18.6%p) > 공기업 (-29.2%p) > 시민단체 (-29.2%p) > 경찰 (-29.9%p) > 대통령실 (-30.5%p) > 신문사 (-31.1%p) > TV방송사 (-32.4%p) > 노동조합 (-52.2%p) > 국회 (-66.4%p) > 정당 (-75.5%p)
- 신뢰도 지수 2: 의료기관 (3.08점) > 군대 (2.73점) > 대기업 (2.72점) > 교육기관 (2.66점) > 금융기관 (2.57점) > 중앙정부 부처 (2.47점) > 법원 (2.41점) > 지방자치단체 (2.41점) > 대통령 (2.26점) > 종교기관 (2.25점) > 공기업 (2.23점) > 경찰 (2.18점) > 검찰 (2.16점) > 신문사 (2.14점) > TV방송사 (2.11점) > 시민단체 (2.08점) > 대통령실 (2.03점) > 노동조합 (1.86점) > 국회 (1.75점) > 정당 (1.68점)

○ 10월 조사와 3월 조사 비교 (- 신뢰도 하락, 0 그대로, + 신뢰도 상승)

- 신뢰도 지수 1: 대통령실 (-26.6%p) < 대통령 (-20.5%p) < 중앙정부 부처 (-16.7%p) < 공기업 (-8.0%p) < 정당 (-6.1%p) < 지방자치단체 (-5.6%p) < 교육기관 (-4.7%p) < 국회 (-4.0%p) < 시민단체 (-3.0%p) < 경찰 (-2.8%p) < 의료기관 (-1.4%p) < 노동조합 (-0.6%p) < 군대 (+1.3%p) < 금융기관 (+5.1%p) < 대기업 (+6.3%p) < 종교기관 (+9.8%p) < 검찰 (+10.6%p) < 법원 (+13.6%p) < 신문사 (17.2%p) < TV방송사 (+21.6%p)
- 신뢰도 지수 2: 대통령실 (-0.37점) < 대통령 (-0.29점) < 정당 (-0.16점) < 중앙정부 부처 (-0.15점) < 국회 (-0.13점) < 경찰 (-0.08점) < 공기업 (-0.06점) < 노동조합 (-0.04점) < 교육기관 (-0.03점) < 시민단체 (-0.03점) < 의료기관 (-0.03점) < 지방자치단체 (-0.01점) < 군대 (0.00점) < 금융기관 (+0.06점) < 대기업 (+0.07점) < 종교기관 (+0.08점) < 검찰 (+0.09점) < TV방송사 (+0.11점) < 법원 (+0.12점) < 신문사 (+0.15점)

기관 신뢰도 (1)

(단위: %, %p, 점수, N=636)

	① 전혀 믿지 않는다 %	② 별로 믿지 않는다 %	③ 약간 믿는다 %	④ 매우 믿는다 %	①+② 믿지 않음 %	③+④ 믿음 %	(믿음- 믿지 않음) %p	계 %	(평균) 점
대통령	36.0	21.1	23.9	19.0	57.1	42.9	-14.2	100.0	(2.26)
대통령실	40.7	24.5	26.3	8.5	65.3	34.7	-30.5	100.0	(2.03)
중앙정부 부처	12.7	35.2	44.5	7.5	48.0	52.0	4.1	100.0	(2.47)
국회	42.5	40.7	16.5	0.3	83.2	16.8	-66.4	100.0	(1.75)
정당	44.5	43.2	12.3	0.0	87.7	12.3	-75.5	100.0	(1.68)
법원	12.9	38.1	44.0	5.0	50.9	49.1	-1.9	100.0	(2.41)
검찰	36.3	22.6	29.6	11.5	59.0	41.0	-17.9	100.0	(2.16)
경찰	18.2	46.7	33.6	1.4	64.9	35.1	-29.9	100.0	(2.18)
지방자치단체	8.6	44.3	44.8	2.2	53.0	47.0	-6.0	100.0	(2.41)
공기업	13.4	51.3	34.4	0.9	64.6	35.4	-29.2	100.0	(2.23)
군대	5.8	27.0	55.3	11.8	32.9	67.1	34.3	100.0	(2.73)
노동조합	39.3	36.8	22.6	1.3	76.1	23.9	-52.2	100.0	(1.86)
시민단체	32.2	32.4	30.0	5.3	64.6	35.4	-29.2	100.0	(2.08)
TV방송사	25.0	41.2	32.1	1.7	66.2	33.8	-32.4	100.0	(2.11)
신문사	21.1	44.5	33.5	0.9	65.6	34.4	-31.1	100.0	(2.14)
교육기관	4.7	30.5	58.5	6.3	35.2	64.8	29.6	100.0	(2.66)
의료기관	1.9	10.7	65.1	22.3	12.6	87.4	74.8	100.0	(3.08)
대기업	5.5	28.0	56.0	10.5	33.5	66.5	33.0	100.0	(2.72)
종교기관	19.3	39.9	37.1	3.6	59.3	40.7	-18.6	100.0	(2.25)
금융기관	6.4	35.8	52.4	5.3	42.3	57.7	15.4	100.0	(2.57)

주: 평균은 '전혀 믿지 않는다' 1점~'매우 믿는다' 4점의 값을 주어 계산.

기관 신뢰도 (2)

(단위: %, %p, 점수)

기관	3월 조사 (N=N=1086)				10월 조사 (N=636)				10월-3월 변동	
	부정	긍정	긍정-부정	(평균)	부정	긍정	긍정-부정	(평균)	긍정-부정	(평균)
	①+②	③+④	%p	점수	①+②	③+④	%p	점수	%p	점수 차이
대통령	46.9	53.1	6.3	(2.55)	57.1	42.9	-14.2	(2.26)	-20.5	-0.29
대통령실	51.9	48.1	-3.9	(2.40)	65.3	34.7	-30.5	(2.03)	-26.6	-0.37
중앙정부 부처	39.6	60.4	20.8	(2.62)	48.0	52.0	4.1	(2.47)	-16.7	-0.15
국회	81.2	18.8	-62.4	(1.88)	83.2	16.8	-66.4	(1.75)	-4.0	-0.13
정당	84.7	15.3	-69.4	(1.84)	87.7	12.3	-75.5	(1.68)	-6.1	-0.16
법원	57.7	42.3	-15.5	(2.29)	50.9	49.1	-1.9	(2.41)	13.6	0.12
검찰	64.3	35.7	-28.5	(2.07)	59.0	41.0	-17.9	(2.16)	10.6	0.09
경찰	63.5	36.5	-27.1	(2.26)	64.9	35.1	-29.9	(2.18)	-2.8	-0.08
지방자치단체	50.2	49.8	-0.4	(2.42)	53.0	47.0	-6.0	(2.41)	-5.6	-0.01
공기업	60.6	39.4	-21.2	(2.29)	64.6	35.4	-29.2	(2.23)	-8.0	-0.06
군대	33.5	66.5	33.0	(2.73)	32.9	67.1	34.3	(2.73)	1.3	0.00
노동조합	75.8	24.2	-51.6	(1.90)	76.1	23.9	-52.2	(1.86)	-0.6	-0.04
시민단체	63.1	36.9	-26.2	(2.11)	64.6	35.4	-29.2	(2.08)	-3.0	-0.03
TV방송사	77.0	23.0	-54.0	(2.00)	66.2	33.8	-32.4	(2.11)	21.6	0.11
신문사	74.1	25.9	-48.3	(1.99)	65.6	34.4	-31.1	(2.14)	17.2	0.15
교육기관	32.9	67.1	34.3	(2.69)	35.2	64.8	29.6	(2.66)	-4.7	-0.03
의료기관	11.9	88.1	76.2	(3.11)	12.6	87.4	74.8	(3.08)	-1.4	-0.03
대기업	36.6	63.4	26.7	(2.65)	33.5	66.5	33.0	(2.72)	6.3	0.07
종교기관	64.2	35.8	-28.4	(2.17)	59.3	40.7	-18.6	(2.25)	9.8	0.08
금융기관	44.8	55.2	10.3	(2.51)	42.3	57.7	15.4	(2.57)	5.1	0.06

주: 평균은 '전혀 믿지 않는다' 1점~'매우 믿는다' 4점의 값을 주어 계산.

V. 조사집단 간 비교분석

설동훈 (전북대학교, 한국사회학회)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음 여섯 분야에서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 2.5점)

○ 붉은 색으로 표시한 네 분야에서 ‘여당 국회의원’만 긍정 평가 우위; 나머지 분야에서 다른 집단은 부정 평가가 더 많음

- **정치 분야**: 여당 국회의원 (2.35점) > 사회과학자 3월 (1.86점) > 사회과학자 10월 (1.67점) > 야당 국회의원 (1.65점) > 기업인 (1.53점)
- **외교·안보 분야**: 여당 국회의원 (3.06점) > 사회과학자 3월 (2.25점) > 사회과학자 10월 (2.19점) > 기업인 (2.00점) > 야당 국회의원 (1.71점)
- **경제 분야**: 여당 국회의원 (2.82점) > 사회과학자 10월 (2.17점) > 사회과학자 3월 (2.16점) > 기업인 (1.93점) > 야당 국회의원 (1.53점)
- **기업 분야**: 여당 국회의원 (2.76점) > 사회과학자 10월 (2.47점) > 사회과학자 3월 (2.29점) > 기업인 (2.26점) > 야당 국회의원 (2.00점)
- **사회 분야**: 여당 국회의원 (2.29점) > 사회과학자 10월 (2.06점) > 사회과학자 3월 (2.15점) > 기업인 (2.00점) > 야당 국회의원 (1.94점)
- **문화·교육 분야**: 여당 국회의원 (2.71점) > 사회과학자 3월 (2.29점) > 사회과학자 10월 (2.21점) > 기업인 (2.32점) > 야당 국회의원 (2.18점)

현재 대한민국은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

(단위: %, %p, 점수)

	여당 국회의원 (N=17)	야당 국회의원 (N=17)	기업인 (N=100)	사회과학자	
				3월 (N=1086)	10월 (N=636)
정치 분야	2.35	1.65	1.53	1.86	1.67
외교·안보 분야	3.06	1.71	2.00	2.25	2.19
경제 분야	2.82	1.53	1.93	2.16	2.17
기업 분야	2.76	2.00	2.26	2.29	2.47
사회 분야	2.29	1.94	2.00	2.15	2.06
문화·교육 분야	2.71	2.18	2.32	2.29	2.21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

42개 주요 국정과제의 중요도-수행도 분석

□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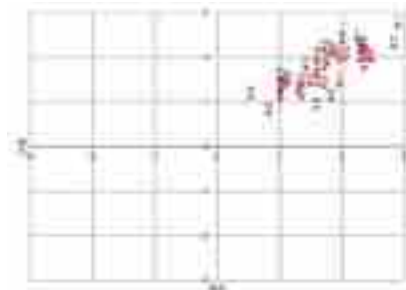
- **권장 영역 (중요도 높고, 수행도 높음):** (1) 여당 국회의원: 42개 국정과제 모두, (2) 야당 국회의원: 7개 국정과제, (3) 기업인: 39개 국정과제, (4) 사회과학자: 40개 국정과제
- **긴급개선 영역 (중요도 높으나, 수행도 낮음):** (1) 여당 국회의원: 0개, (2) 야당 국회의원: 31개 국정과제, (3) 기업인: 3개 국정과제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3.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4) 사회과학자: 2개 국정과제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차별화 영역 (중요도 낮으나, 수행도 높음):** (2) 야당 국회의원: 2개 국정과제 (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2.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 낮고, 수행도 낮음):** (2) 야당 국회의원: 2개 국정과제 (4.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6.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중요도-수행도 간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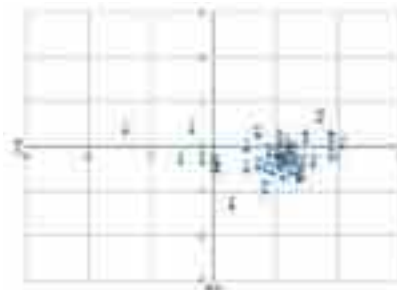
- 여당 국회의원: .792
- 야당 국회의원: .036
- 기업인: .589
- 사회과학자: .213

→ 여당 국회의원과 기업인은 강한 상관관계; 사회과학자는 약한 상관관계; 야당 국회의원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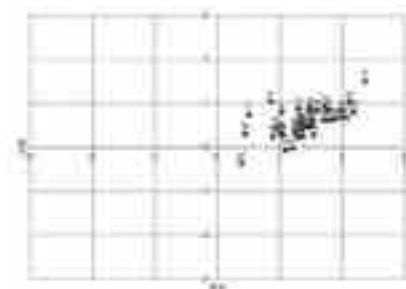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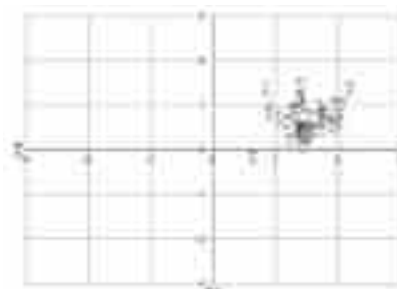
여당 국회의원 (42개 정책 평균: 수행 1.70, 중요 1.74)



야당 국회의원 (42개 정책 평균: 수행 -0.30, 중요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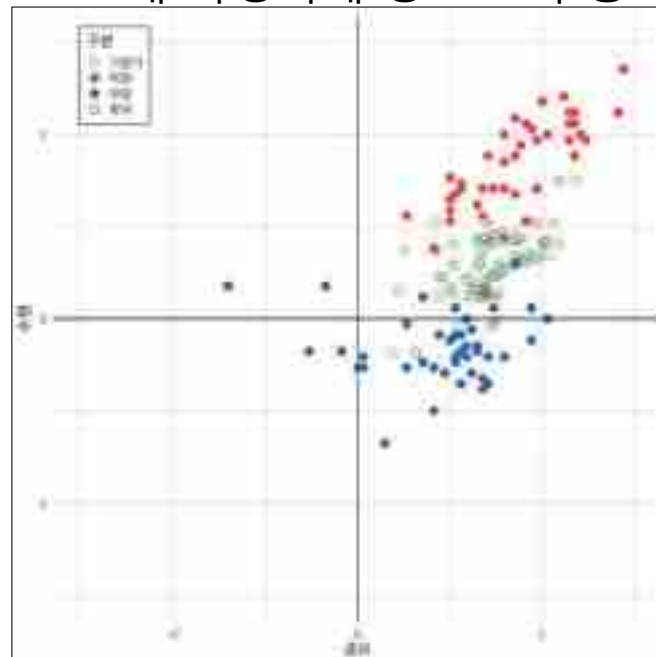
기업인 (42개 정책 평균: 수행 0.57, 중요 1.41)



사회과학자 (42개 정책 평균: 수행 0.57, 중요 1.48)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정부의 주요 42개 국정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20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수행도 분석

□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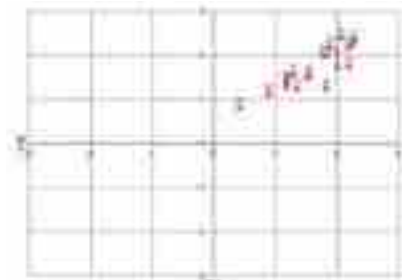
- **권장 영역 (중요도 높고, 수행도 높음):** (1) 여당 국회의원: 20개 정책과제 모두, (2) 야당 국회의원: 4개 정책과제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1.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3) 기업인: 17개 정책과제, (4) 사회과학자: 17개 정책과제
- **긴급개선 영역 (중요도 높으나, 수행도 낮음):** (1) 여당 국회의원: 0개, (2) 야당 국회의원: 16개 정책과제, (3) 기업인: 3개 정책과제 (24.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3.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4) 사회과학자: 3개 정책과제 (15.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20. 선거제도 개혁, 18. 국회 개혁 (선진화법, 국회의원 소환제 등))
- **차별화 영역 (중요도 낮으나, 수행도 높음):** 없음
-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 낮고, 수행도 낮음):** 없음

□ 중요도-수행도 간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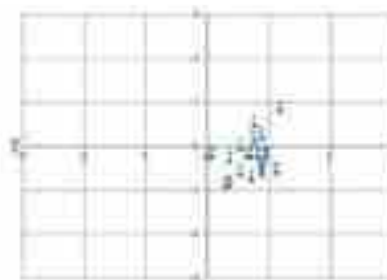
- 여당 국회의원: .863
- 야당 국회의원: .381
- 기업인: .829
- 사회과학자: .686

→ 여당 국회의원, 기업인, 사회과학자는 강한 상관관계; 야당 국회의원은 약한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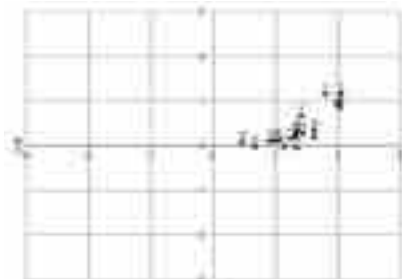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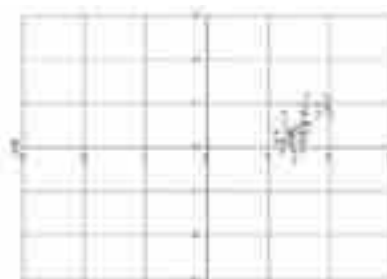
여당 국회의원 (20개 정책 평균: 수행 1.70, 중요 1.64)



야당 국회의원 (20개 정책 평균: 수행 -0.29, 중요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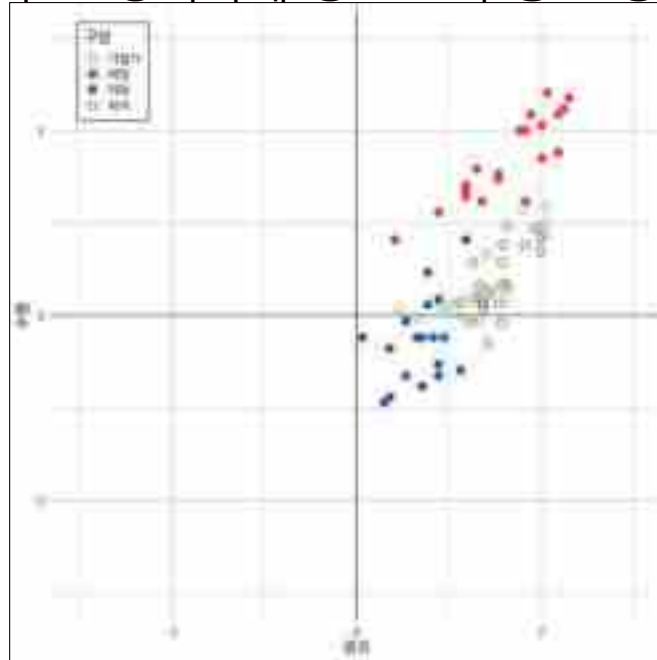
기업인 (20개 정책 평균: 수행 0.40, 중요 1.38)



사회과학자 (20개 정책 평균: 수행 0.37, 중요 1.53)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김'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20개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수행도 평가 (2)



주: 응답 결과에서 '매우 중요'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치 않음' -3점;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3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3점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

정책 현안 별 핵심 개혁과제: 제1순위+제2순위 (1)

(단위: %, N)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책	(N)	혁신적인 출산 장려 정책	연금 개혁	기술혁신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확대	이민정책 체계화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47.1	52.9	29.4	41.2	5.9	0.0	11.8	188.2
야당 국회의원	(17)	58.8	58.8	29.4	47.1	5.9	0.0	0.0	200.0
기업인	(100)	56.0	57.0	36.0	30.0	13.0	2.0	3.0	197.0
사회과학자	(636)	54.7	45.4	36.9	30.8	20.1	5.7	3.1	196.9
경제의 저성장 극복	(N)	대·중소기업간 혁신상생 선순환모델의 구축	창의적 인재 양성	기업 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국가재정 건전화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17.6	23.5	64.7	29.4	47.1	5.9	5.9	194.1
야당 국회의원	(17)	70.6	64.7	23.5	23.5	5.9	0.0	5.9	194.1
기업인	(100)	41.0	34.0	56.0	31.0	32.0	2.0	2.0	198.0
사회과학자	(636)	50.3	46.2	36.0	32.5	27.5	2.7	2.4	197.6
정치 민주주의 강화	(N)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부정부패 척결	정당 내 민주주의 강화	권력구조(대통령제) 개편을 위한 개헌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70.6	47.1	41.2	29.4	0.0	0.0	5.9	194.1
야당 국회의원	(17)	70.6	29.4	23.5	52.9	23.5	0.0	0.0	200.0
기업인	(100)	68.0	44.0	31.0	44.0	11.0	2.0	0.0	200.0
사회과학자	(636)	55.0	45.3	40.9	29.2	21.1	3.8	2.4	197.6
사회 불평등 완화	(N)	지역간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복지제도 강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시행	대학입시·취업에서의 불공정 해소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70.6	29.4	41.2	5.9	41.2	0.0	5.9	194.1
야당 국회의원	(17)	52.9	35.3	52.9	23.5	35.3	0.0	0.0	200.0
기업인	(100)	31.0	48.0	56.0	31.0	32.0	0.0	1.0	199.0
사회과학자	(636)	46.1	41.7	39.5	30.7	26.9	2.0	6.6	193.4

정책 현안 별 핵심 개혁과제: 제1순위+제2순위 (2)

(단위: %, N)

노동개혁	(N)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	양대 노총 기득권 철폐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완화 등)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제 완화	최저임금 차등화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23.5	64.7	23.5	41.2	41.2	5.9	0.0	200.0
야당 국회의원	(17)	88.2	35.3	41.2	5.9	5.9	11.8	5.9	194.1
기업인	(100)	45.0	53.0	38.0	24.0	27.0	3.0	5.0	195.0
사회과학자	(636)	57.2	46.2	38.5	24.7	18.1	0.9	4.6	190.3
연금개혁	(N)	공적연금부터 조정	국민연금공단 대수술	연금 수급 연령 상황 조정	연금 납입금 인상	현재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 조정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29.4	76.5	41.2	29.4	23.5	0.0	0.0	200.0
야당 국회의원	(17)	23.5	35.3	47.1	47.1	29.4	5.9	5.9	194.1
기업인	(100)	74.0	58.0	24.0	22.0	16.0	2.0	2.0	198.0
사회과학자	(636)	45.1	40.7	39.0	33.8	20.6	3.1	8.8	191.2
교육개혁	(N)	교육 기회 격차 해소	교육교부금 개혁	초중고등학교 전수 학력평가 시행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및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76.5	64.7	52.9	0.0	5.9	0.0	0.0	200.0
야당 국회의원	(17)	94.1	35.3	5.9	29.4	23.5	0.0	5.9	194.1
기업인	(100)	72.0	38.0	21.0	27.0	22.0	4.0	8.0	192.0
사회과학자	(636)	70.0	48.3	29.1	19.5	11.8	9.4	6.0	194.0
외교안보 정책 추진	(N)	경제안보 강화	북핵 문제 해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상호 존중 기반 한중 관계 구축	한일 관계 개선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64.7	58.8	47.1	5.9	23.5	0.0	0.0	200.0
야당 국회의원	(17)	58.8	52.9	5.9	29.4	29.4	0.0	11.8	188.2
기업인	(100)	75.0	35.0	33.0	43.0	12.0	2.0	0.0	200.0
사회과학자	(636)	63.2	40.3	33.6	32.2	20.0	4.1	3.3	196.7

정책 현안 별 핵심 개혁과제: 제1순위+제2순위 (3)

(단위: %, N)

국제협력 강화	(N)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기후변화 적극 대응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 개발 원조 확대	국제 보건 협력 확대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76.5	35.3	47.1	35.3	5.9	0.0	0.0	200.0
야당 국회의원	(17)	70.6	82.4	23.5	11.8	11.8	0.0	0.0	200.0
기업인	(100)	63.0	62.0	33.0	20.0	14.0	0.0	4.0	196.0
사회과학자	(636)	64.3	59.3	32.5	20.3	15.1	0.9	3.8	196.2
핵심전략산업 육성	(N)	혁신산업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혁신 속도 제고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서비스 경제 활성화	기타	없다	계
여당 국회의원	(17)	88.2	29.4	35.3	29.4	17.6	0.0	0.0	200.0
야당 국회의원	(17)	58.8	41.2	41.2	41.2	17.6	0.0	0.0	200.0
기업인	(100)	67.0	34.0	35.0	37.0	17.0	0.0	5.0	195.0
사회과학자	(636)	71.2	42.9	33.8	28.6	17.6	0.8	2.5	197.5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사회변동 평가

□ 한국의 사회변동 평가 (7개 영역)

• “귀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음 사항이 어떻게 바뀐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 여당 국회의원은 7개 영역에서 모두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 야당 국회의원, 기업인, 사회과학자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빠진 것으로 평가

→ 이는 앞에서 살펴본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정치 분야,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기업 분야, 사회 분야, 문화·교육 분야)와 동일한 응답 패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변동 평가

(단위: 점수)

	여당 국회의원 (N=17)	야당 국회의원 (N=17)	기업인 (N=100)	사회과학자 (N=636)
자유의 신장	1.41	-1.88	-0.73	-0.32
경제적 규제 완화	1.65	-0.12	-0.22	0.40
국가 안보 강화	1.88	-1.65	-0.84	-0.01
정치적 양극화 해소	0.18	-2.47	-1.81	-1.25
국제협력 강화	1.65	-1.53	-0.92	-0.19
보호무역 대응	1.24	-1.71	-0.86	-0.35
미래혁신산업 성장	1.18	-0.94	-0.46	0.00

주: 평균은 '크게 좋아졌다' 3점,, '그대로다' 0점,, '크게 나빠졌다' -3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

정부가 더욱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단: 제1순위+제2순위

(단위: %)

	여당 국회의원 (N=17)	야당 국회의원 (N=17)	기업인 (N=100)	사회과학자 (N=636)
청년	58.8	58.8	64.0	57.4
저소득층	58.8	64.7	50.0	53.1
노인	29.4	23.5	38.0	36.2
여성	17.6	41.2	18.0	24.4
장애인	5.9	11.8	11.0	12.4
이주민	11.8	0.0	11.0	10.1
기타	5.9	0.0	4.0	3.6
없다	5.9	0.0	2.0	1.4
계	194.1	200.0	198.0	198.6

기관 신뢰도

□ 기관 신뢰도 (20개 기관)의 네 집단 응답결과의 상관계수표

- “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까?”
- 여당 국회의원의 응답 결과가 다른 집단의 응답 결과와 갖는 상관관계가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기업인	사회과학자3월	사회과학자10월
여당 국회의원	1	-.436	.095	.429	.322
야당 국회의원		1	.691**	.281	.474*
기업인			1	.821**	.930**
사회과학자3월				1	.923**
사회과학자10월					1

** p < .01; * p < .05 (유의수준 양측검정).

기관 신뢰도

(단위: 점수)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기업인	사회과학자	
	(N=17)	(N=17)	(N=100)	3월 (N=1086)	10월 (N=636)
대통령	3.24	1.41	1.95	2.55	2.26
대통령실	2.76	1.29	1.80	2.40	2.03
중앙정부 부처	3.00	2.00	2.12	2.62	2.47
국회	2.53	2.24	1.66	1.88	1.75
정당	2.41	2.29	1.75	1.84	1.68
법원	2.53	2.59	2.26	2.29	2.41
검찰	3.29	1.47	1.80	2.07	2.16
경찰	2.12	2.18	2.11	2.26	2.18
지방자치단체	2.41	2.41	2.29	2.42	2.41
공기업	2.00	2.59	2.21	2.29	2.23
군대	2.76	2.71	2.47	2.73	2.73
노동조합	1.53	2.29	1.88	1.90	1.86
시민단체	1.47	2.53	2.01	2.11	2.08
TV방송사	1.94	2.41	2.14	2.00	2.11
신문사	2.41	2.24	1.98	1.99	2.14
교육기관	2.12	2.65	2.43	2.69	2.66
의료기관	2.76	3.00	2.94	3.11	3.08
대기업	2.76	2.53	2.62	2.65	2.72
종교기관	2.00	2.12	1.97	2.17	2.25
금융기관	2.53	2.53	2.56	2.51	2.57

주: 평균은 '전혀 믿지 않는다' 1점~'매우 믿는다' 4점의 값을 주어 계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회별 주제 발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 함께 잘사는 혁신강국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인구감소, 지방소멸 - 치명적 위기인가?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정치의 미래와 정치개혁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Global Poly-Crisis와 재정정책 대응 방향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Session2 :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주제 발표



고영선 I 사회

-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 (전) 국무조정실 제2차장
- (전) 고용노동부 차관
-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한정화 I 발표

- (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현)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위원장
- (전)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13대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학회, 인사조직학회, 전략경영학회 회장 역임



전상인 I 발표

-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전) 한국미래학회 회장
- (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강원택 I 발표

-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전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전 국회 남북화해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김우철 I 발표

-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현) 한국재정학회 이사
- (전) 재정개혁특위원
-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Session2 :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토론



김인수 | 토론

- (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전)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 팀장, 금융부 차장, 오피니언부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University of Michigan MBA



박명호 | 토론

- (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 안민정책포럼 회장
-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홍일표 | 토론

-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 (현) 사회학 박사
-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 (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방문연구원

함께 잘사는 혁신강국

韓正和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위원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혁신과 국가 경쟁력

대전환, 복합위기의 시대의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
- 미중 전쟁(무역, 기술, 패권)과 GVC 재구축
- With Corona 시대
- 환경/기후 위기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정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부담 가중

“함께 잘사는 혁신강국 ”

대한민국은 혁신강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한가?

- 혁신의 글로벌 사이클과 기술/산업 주도권(techno/industry-hegemony) 이동
- 20세기 전반 미국 주도(산업화 시대 전기)
 - 2차 산업혁명(전기, 석유 등 에너지 혁명) 주도
 -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OB, OR, 생산관리, SQC
- 1960~80년대 일본 주도(산업화 시대 후기)
 - SQC → TQC → TQM → TPM
 - 생산성 향상 운동, 3정, 5S, JIT
- 한국은 일본 주도 혁신시대에 글로벌 혁신 사이클 막차타기 성공
 -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등

4

대한민국은 혁신강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한가?

- 1980년대 미국의 반격(전환기: 산업화 → 지식정보화)

- BPR, CSM, 식스 시그마
- G5 플라자 회의 이후 엔고 시대의 도래로 일본의 혁신 경쟁력 퇴조
-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약진

참고: In Search of Excellence(Peters & Waterman), Megatrends(Naisbitt)

- 1990년대 미국 주도(지식정보화 시대)

- 컴퓨터와 인터넷 등 3차 산업혁명(정보통신) 시대
- 가치혁신, BMI, SCM

-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강국으로 도약

5

대한민국은 혁신강국으로의 발전이 가능한가?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 도래

- 미국 주도하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의 각축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제조 2025

- 한국은?

- 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주도 성장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의 혁신 따라잡기
- 90년대 이래 글로벌화, 개방화, 정보화의 물결 편승
- 현재 미중 무역/기술/패권 경쟁, COVID19 상황으로 인한 GVC 변화

- GVC 변화/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회와 위협

- China Black Hole의 지연과 China Decoupling의 반사이익
- 한국기업의 품질, 원가, 납기(QCD) 신뢰성 향상
- 문화 콘텐츠와 결합된 시너지 효과 발휘

6

함께 잘사는 혁신강국



'함께 잘사는'이란?

- 양극화 해소
-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감소
- 사회 안전망 강화
-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 확립
- 공생과 상생의 제도적, 문화적 기반 확립

‘혁신강국’이란?

- 혁신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
 - 미래 신산업 발굴과 육성
 - 벤처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활성화
 -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와 갈등 해결
 -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선순환 실현
 - 경제사회 활동의 자유와 개방, 공정경쟁과 보상을 통한 신뢰문화 구축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기업가정신

- 국부창출 기업가정신
 - 경제주체들이 혁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정신과 행동
- 사회가치 기업가정신
 -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환경, 인권, 복지 등의 영역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정신
- 자아실현 기업가정신
 -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가치를 발현시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기업가정신 발현의 조건

▪ 자수성가 성취사회

- 신분, 지위, 부의 대물림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여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 자유·개방 역동경제

- 경제 주체들이 자유의지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활력을 높이도록 함

▪ 공정·상생 신뢰문화

-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하여 성과를 실현하며, 국민 각자가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상호 신뢰를 높이도록 함

4대 원칙: 자유

▪ 자유의 본질

- 외부 속박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자연권
- 사적자치, 재산권 보장과 함께 시장경제 발달에 기여
-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헌법 119조)
-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은 자유 가치를 존중할 때 발현되며 자유가 번영의 원천임

4대 원칙: 자유

■ 자유와 혁신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성취동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본성의 자연적인 발현으로 가능해짐
- 경제적 자유는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사회적 부의 증진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의 평등 확대,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 운용을 가능케함.
- 획일적 기준으로 법적·제도적 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체제는 개인의 능력발휘를 제한하고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킴
- 국가가 시장과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국가로의 변질이 우려되는 상황

4대 원칙: 자유

■ 자유 보장의 방법

- 정부의 시장개입·규제 축소
- 정치의 과도한 행정 개입 방지
- 민생중시·실사구시 정치행태 확립
-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참여
- 민간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4대 원칙: 개방

■ 열린 생태계와 국가의 흥망성쇠

- 개방을 통한 강대국으로의 발전(영국, 미국, 일본 등)
-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통하여 계층간 장벽을 허문 국가들의 발전
- 한국은 대내적으로 기득권 중심의 닫힌 생태계의 문제점 증가
-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암묵적 담합과 부담 전가

4대 원칙: 개방

■ 열린 생태계와 혁신 기업가정신

-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생태계
- 한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해외시장을 지향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자유화, 세계화, 정보화의 글로벌 모멘텀 활용
-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만이 아닌 제도와 의식 혁명
- 의료, 법률, 금융 등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인 생태계의 개혁이 필요함

4대 원칙: 개방

- 열린 생태계 실현 방법
 - 재벌과 노조의 폐쇄적 생태계 개혁
 - 열린 정책 프로세스
 - 오픈 이노베이션과 개방 플랫폼
 - 규제개혁
 - 재도전 활성화

4대 원칙: 공정

-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 경제부문간 불균형 확대
 -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신뢰자본 부족
- 공정경제
 - 공정한 기회
 - 공정한 경쟁
 - 공정한 보상

4대 원칙: 공정

■ 공정과 혁신

- 공정경쟁과 공정분배는 지속가능한 혁신의 필요조건
- 신뢰자본 결여는 거래비용 증가를 가져옴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혁신 생태계의 발전

■ 공정과 혁신 기업가정신

- 공정한 기회와 보상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기초
-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초래
- 법에 의한 강압적 신뢰는 자유시장 원칙을 약화시킴

4대 원칙: 공정

■ 공정거래 확립 방법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 불공정 거래에 의한 기대이익 제거 및 페널티 강화
- 공정한 심사평가제도 확립
- 심사평가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평가 확대
- 플랫폼 경제의 독점성 완화 및 공정성 확보

4대 원칙: 상생

■ 상생: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 경제권력의 불균형과 소득 양극화
- 신분 이동 가능성 축소와 계층의 고착화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의 부작용과 역기능 방지

4대 원칙: 상생

■ 상생과 혁신

- 혁신을 통한 포지티브섬 게임 실현
- 협력적 경쟁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상생 강화
- 전통산업과 혁신산업간의 상생 실현

■ 상생과 기업가정신

- 혁신과 상생의 선순환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
- 혁신성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문화 구축

4대 원칙: 상생

■ 상생 생태계 실현 방법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기업가정신 활성화
 - 공정거래, 창업활성화, 개방혁신, 선도형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 추진
 - 사회적 안전망, 능동적 인구대책 등을 통한 불균형 완화
-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생태계 조성
- 양극화와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 민주주의 실현
-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에 대한 과세 강화
 - 혁신 분야 수익에 대한 과세 완화/비혁신 분야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비전: 함께 잘사는 혁신 강국

- 선진 과학기술 강국
- 신산업 규제개혁
- 혁신시장 확대
- 상생혁신 활성화
- 혁신 투자 인프라 확충
- 혁신·디지털 인재 육성
- 혁신성과의 공정한 나눔

감사합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 치명적 위기인가?

전상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 거룩한 고정관념과 상투적 대책

- 출산을 제고, 지방 균형발전

“지역균형을 위해 대기업, 명문대,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지방으로 내려 보낼 계획”

(이재명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9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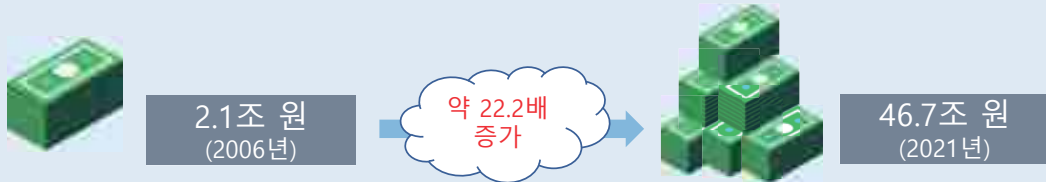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윤석열 대통령, 2022년 9월 27일)

- 지성적 후퇴전 (우치다 다쓰루 외, <인구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
-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상상력 (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 ‘禍福同門’

역대 지방·인구정책의 성과와 평가

• 저출산 대응 예산



• 다양하고 기발한 출산 장려정책

- 합계출산율 0.81(2021년, OECD 최저 수준)
- 2021년 데드크로스 경험
- 인구증가율 -0.2% (2022년 5,200만 명 ⇒ 2070년 3,8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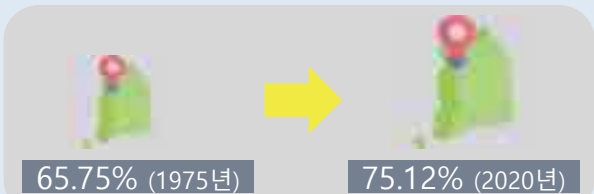
역대 지방·인구정책의 성과와 평가

• 지방이전 자원 1985-2020년 사이 50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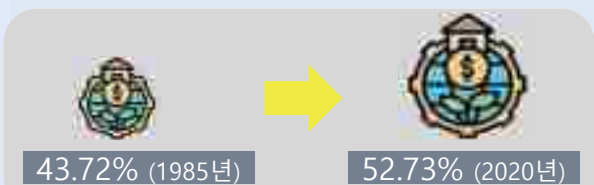


• 지방가용 자원 폭증

- 총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 명목 GDP 대비 수도권 GRDP



역대 지방·인구정책의 성적과 평가

- 제2수도권, 남방한계선, 오송역-세종시 17KM, '노인과 바다'
- '그나마 선방'(인디언 기우제)

vs. '참담한 실패'(정책의 배신)

인구·지방문제의 재인식

1. 지방의 재인식

- '지방' 개념의 역사성, 상대성
- 신노마드사회(자크 아탈리,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 모빌리티 전환(존 어리, <모빌리티>)
- 상시접속사회(브라이언 쉐, <올웨이즈 온>)
- 전국적 균질화, 지방의 비장소화, 고향의 상실, 제자리 실향민

2. 인구의 재인식

- 인구의 '정치적 발명'(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경계(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인구·지방문제의 재인식

3. 인구문제와 공간문제의 '통합적' 접근

- 1) '규모의 경제' 및 '스케일 법칙'(제프리 웨스트, <스케일>))

"지역마다 기업과 산업을 끌어들이는 지역균형개발정책은 시대착오...
현대 첨단산업은 밀집해야 효과"

(인강연모집단, <21세기 지방>)

2) 인구의 공간적 유동성 강화

- 정주인구에서 유동인구로
- '생활인구'(행안부, 부산시)
- '관계인구'(일본의 제2기 지방창생전략, 춘천 '백만 글로벌 관계인구',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 '방문자 경제'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생존·발전 전략

1. 정치권 배제

- 지역균형의 당위성에서 진정성으로
- 풀뿌리 없는 지방자치: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 무엇을 위한 지역발전인가?
 - 지방선거 1표의 가치 3512만원
 -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 지방선거와 정치특수, 정치남인 양산
 - 지방공무원 30만명 돌파, '아금' 급증
- 정치권의 자리, 공무원의 밥그릇
 - 지역주민은 人口인가 人質인가?
 - 인구상한제, 인구할당제 도입?
- 지방간 지리적 경계의 주민 위주 재구성 필요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생존·발전 전략

2. 다양성 및 차별성 경쟁

- 기계적 지역균형 논리
 - 모든 지방이 동일목표와 단일가치 지향
 - 할당과 안배, 1/n 주의
 - 현재 국립공원 22개, 지방공항 15개(6개 추가건설 예정)
 - 모든 도시가 기업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대학도시, 교육도시, 역사도시, 복지도시, 글로벌 도시
- 정책 베끼기와 흉내내기
 - 단기간 경쟁 구조하에 갈수록 닮아가는 지방
 - 토건국가의 전국화, 삼천리 금수강산 -> '전국이 공사 중'
 - '미니' 국민국가로서의 道政과 市政 (제왕적 지방자치)
- '발로 뛰는 투표' (voting with the foot)와 지방자치 본래 가치 달성
 - 지자체 간 확실한 개성과 차별성(부산의 '영머상용도시' 추진 논란)
 - 과감한 분권과 확실한 책임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생존·발전 전략

3. 세계화 + 지방화

- 제로섬 게임에서 비(非)제로섬 게임으로
- 사실상 섬나라의 닫힌 세계관
 - 지방자치의 국경 넘기
 - '모든 사람을 남으로 볼 때 온 세계가 고향이 된다'
(아베 긴야, <중세를 여행하는 사람들>)
-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사는 법
 -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 '키우기'
 - '다양한 지역들의 '거대한 相異 공동체' 형성 (엔리코 모레티)
 - "지방 하나하나가 국가대표 지역이 되어야" (송병택)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 과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1961년 서울 출생
-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전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전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 저서
"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보수는 어떻게 살아 남았나: 영국 보수당 300년, 몰락 과 재기의 역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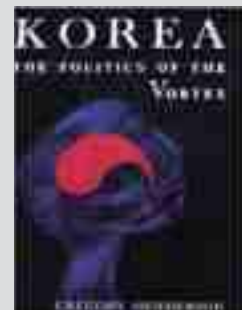


- 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 사회

-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노정
- 새로운 변화가 절박한 시점, 대중적 차원에 그쳐서는 안됨.



- 여전히 국가 주도형, 1인 지배형
 - 수평적, 수직적으로 모두 중앙집중적
 - 승자독식의 경쟁 구도
 - 민주화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 여전
 -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가 개입과 규제는 동전의 양면
- 박정희 패러다임의 재현?
 - '발전국가'적 속성 여전
 - 여전히 국가 주도형 (박근혜, 문재인 차이 없다.)
 - 현 보수, 진보 세력 - 시대의 쌍생아



❖ 통치 환경의 변화

• 박정희 (전두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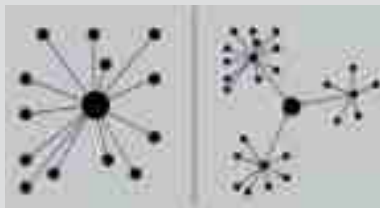
- 정치 억압
(부패, 부정, 비효율, 분열)
- 관료 주도 경제 개발
(효율성 추구)
- '설계사,' '해결사'로서의 국가
- 민간 분야의 자율성, 역량 크게 증가
- 국가 역할의 한계
- 그러나 국가 역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68.2-70.7



- '강한 국가'로부터의 변화
 -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강한 정부"
 - 식민지 통치 - 전쟁 - 권위주의 - 국가주도 경제개발 ...
 - 국가 주도에 의한 통치에 익숙한 구조
 - 오늘날 국가는 전지전능하거나 민간보다 더 유능하지 않다.
- 국가 역할의 한계 인식해야 함,
- 끌고 가겠다고 하기 보다, 함께 가며 지원한다는 태도가 필요



- 국가 역할의 재조정

- 교육 정책을 사례로 보면,
 - 초중고 - 교육청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부 -> 대학
- 정부 주도 혁신은 이제 한계
- 대학 등 지식을 생산하는 곳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 과거 산업인력 양성 - 기술 전수와 모방의 시대
- 대학에 자율성 보장, 입시, 정원에도 자율성 보장
- 산학 연계를 스스로 강화
- 교육 행정 기구의 역할은 고용, 재교육, 평생교육
 - 노동, 고용과 교육의 접목
 - 보다 전문적 지식 전수 -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



- 경쟁의 가열
- 변화의 속도
- 경쟁의 글로벌화
- 빠른 대응, 신속한 변화,
개방적 태도 중요.



- 국가 역할 축소, 민간 영역 발전, 시민사회 활성화, 세계화
 - 국가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
 - 국가의 주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함
- 국가 행정이나 통치 형태에 변화 절실
 - 국가 - 유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변화가 시급한데...

한국 대통령의 두 얼굴 ... ‘제왕적’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 한국 대통령제, 제도보다 인물 요인이 강하다.
 - 독립운동가, 군인, 민주화 운동 지도자.... 권위 갖춘 지도자
 - 카리스마적 리더십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인물에 의해 마련된 제도 : 대통령제
- 애당초부터 제도화보다는 인물 요인 강하다.



■ 지도자 만들어 내는 데 어려움

- 경험 있고 권위를 갖춘 정치 지도자 만나기 어렵다.
- 의회 정치에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검증된 인물보다 새롭고 참신한 인물 선호
- 미디어 정치와 여론조사의 결합
- 포퓰리즘에 취약
- 아웃사이더의 부상: 이번이 마지막?



왕조시대에는 세자를 책봉하고 미리부터 당대의 최고 석학으로부터 왕도를 익히게 했으나 실제로 성군(聖君)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만큼 국가 경영은 어렵고 막중하다.

국민 직선의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국가 경영 수업을 할 겨를도 없고 또 그러한 장치도 없다. 누구든 표심만 잘 잡는 인기 영합에 능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또 본인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황인정 2009: 210-211.)



• 앙겔라 메르켈

1990년 독일연방의회 진출, 여성청소년부 장관
1994년 환경 및 핵 안전부 장관
1998년 기민당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2000년 4월 10일 기민당 당수로 선출
2002년 총선 패배 후, 야당 리더
2005-2021년 총리



■ 장기적 관점의 국가 과제 설정의 어려움

- 5년짜리 정책의 추진
 - 사실상 3년 남짓한 통치
- 대통령 간에 단절적
 - ‘잃어버린 10년’
 - 전임자에 대한 ‘부정(否定)의 정치’
- 국가의 장기 미래 과제 설정에 어려움
- 구조적 문제, 장기적 과제 해결 안 됨
- 사회적 보수화,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
 - ‘바뀌는 게 없다’ → 포퓰리즘의 정치로



-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정치지도자를 기다리는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또 다른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단칼에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 메시아는 올 것인가? 그야말로 ‘단칼’에 말씀드리죠. 그런 메시아... ‘성공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나와도 성공하기 힘듭니다.....위대한 생각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또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다고 해도, 이 땅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단칼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병준 2012: 255)
- “영웅적 서사”를 가진 인물 더 이상 찾기 어렵다.



12,500km 장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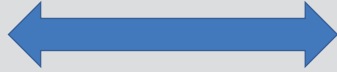
- 87년 체제의 한계 : 변화 필요
 - 변화를 이끌어 낼 힘 개인에게 찾기 어렵다.
 - 복잡다기한 구조, 이해관계, 대통령 혼자서 이끌고 나가는 방식의 한계
 - 승자 독식과 권력 집중에서 벗어나 권력 공유나 협치 가능한 체제 필요
 - 한 사람이 끌고 가기보다 많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 끌고 가는 형태가
오늘의 시대에 보다 적합한 방식
 - 각 기구와 제도의 자율성,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 권력을 나누는 방식의 분권화는 위험
 - 정치에서 권력의 위임은 명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인간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제도적 디자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 권력의 지방 분권화도 필요함

• 87년 체제2: 정당 정치

- 1987년, 1988년 '1노 3김' 4당 체제
- 1990년 1월 3당 합당
- 이후 정당 체계 근본적 변화 없다.
 - 지역주의 정당 정치 여전히 유지
 - 87년의 지역주의와는 다른 상황
 - 전국적 과점, 지역적 독점
 - 폐쇄적 구조, 경쟁 없는 정치
 - 위협적인 경쟁자 등장 어렵다.
 - 정치적 책임성, 반응성 낮은 정치
- 극단적인 수준의 정치 불신



정파-국민의힘
이념 - 보수
지역 - 영남
세대 - 고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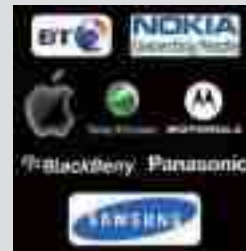
정파-원주당
이념-장르
지역-호남
세대-젊은층

- 집단별로 갈등이 분산되지 않고 축적되고 강화됨.
갈등의 양극화. 두 정당이 갈등을 독점
- 하나의 갈등이 다른 균열, 갈등으로 확산
작은 정파적 갈등도 사회 전체로 확산
이념적, 정파적 양극화를 초래
- 중재, 조정의 역할 부재
양당 중 한 정당 과반일 경우 갈등 더 고조



• 정당 정치의 개혁 시급한 과제

- 정치의 영역 축소, 정당의 약화가 그 해결책 아님.
- 진정한 정치개혁, 정당개혁은 정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 경쟁성 확립이 중요: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갖도록
- 정당 정치의 경쟁성, 책임성, 반응성을 강화시켜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정치권 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교육

-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 민주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공화주의’, ‘적극적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

- 개인의 자유
-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다름에 대한 인정
- 인권의 존중
-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개인의 기여와 봉사
- 견제 받는 권력

- “국가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



- 국가에 모든 걸 의존해서는 더 이상 사회 발전 기대 어렵다.
-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기여, 봉사하는 마음 가져야 한다.
- 특권, 예외없이 모두가 공동체 존속과 발전에 대한 책임 의식 공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 87년 체제에 대한 변화 필요하다.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감사합니다.



Global Poly-Crisis와 재정정책 대응 방향

2022. 11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Presentation 구성

- Global Poly-Crisis 전개와 다중적 위기상황의 특징을 살펴보고 재정정책의 적절한 대응을 논의
-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을 평가
 - 1) 건전재정 기조 전환
 - 2) 지출 재구조화의 성과와 한계
 - 3) 재정준칙 도입
 - 4) 감세기조 세제개편안

A. Global Poly-Crisis와 재정정책 대응

- Global Poly-Crisis
 - 단계별 위기 전개 과정
 - 특징: 위기의 중첩과 확대 가능성
- 위기 국면의 정책적 접근
 - 정책도구의 한계와 예외적 조치
 - 위기 국면의 예외주의적 접근(Prof. Best)
- 재정정책 대응 방향
 - 기본방향: 긴축정책 공조(건전재정)
 - 재정운용지침

B.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 평가

-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재정준칙 도입안,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재정정책 방향 평가
- 핵심 이슈
 - 건전재정 기조의 구현
 - 지출구조조정 성과와 한계
 -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정부안 평가
 - 세제개편안 감세기조의 적절성 여부

Contents

A. Global Poly-Crisis와 정책 대응

1. 단계별 전개과정
2. 특징: 위기의 다중성
3. 정책적 접근
4. 재정정책 대응 방향

B.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 평가

1. 건전재정 기조 구현
2. 지출구조조정 성과와 한계
3.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정부안 평가
4. 감세기조 세제개편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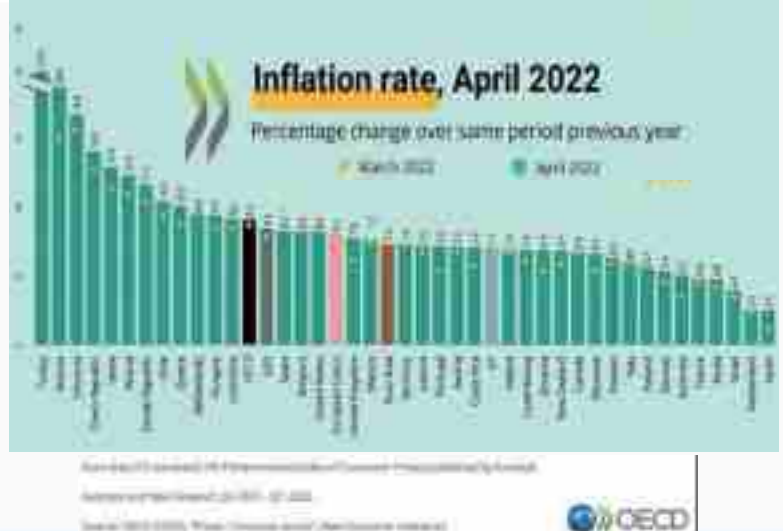
Part A. Global Poly-Crisis와 정책대응

1. 단계별 전개과정

Step I: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코로나 경기침체 극복 위한 확대 금융·재정정책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러·우전쟁 통해 강력한 수준으로 발전

- Corona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된 가운데, 경기침체 극복 위한 적극적 총수요 확대 정책이 경기회복 후까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이 자극
- 러·우전쟁 발발로 인해 급등한 원유가 스 원자재 곡물 가격이 40년만의 강력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 초래
- 2022.4월 기준(yoy): OECD 평균: 9.2%



1. 단계별 전개과정

Step II: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폭등한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급격 전환

-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 미 연준은 역사상 최고 속도로 금리를 인상
- '22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만에 기준금리를 375bp 인상:
0~0.25% --> 3.75~4.0%
- 동시에 재정정책도 긴축 기조 유지:
2022년 재정지출 축소 후
2023년에도 안정 기조 유지

The pace of Fed rate hikes in this cycle, in comparison to previous cycles, has been rapid



1. 단계별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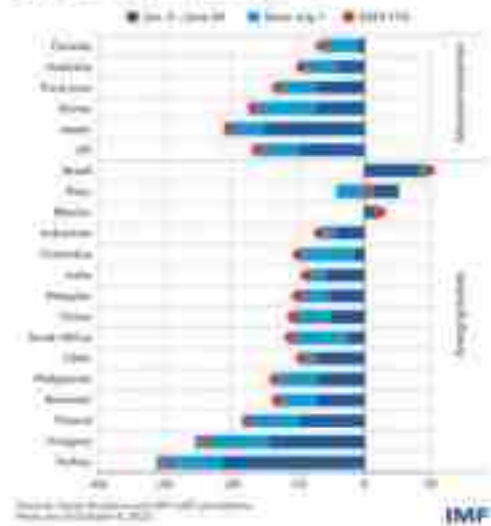
Step III: 자산 및 외환 시장 충격

미국의 고강도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하락세 전환하고, 다른 나라 통화가치 급락

-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나 일반재화 가격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자산 및 외환시장에서는 급격한 가격 조정 발생
-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하락세 전환
- 또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초강세 되면서 미국 이외 국가들은 고환율 문제에 봉착

Dollar surge

For many countries, the weakening of their currencies relative to the US dollar has made the external debt bu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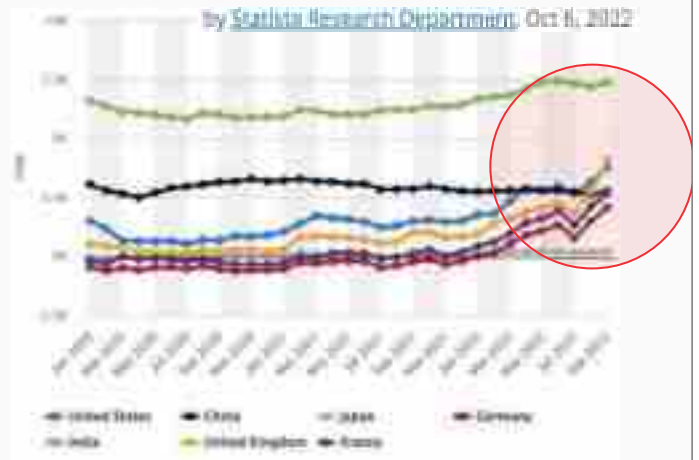
1. 단계별 전개과정

Step IV: 각국 채권시장 충격 확대와 잠재적 금융위기-재정위기 현실화 위험 가증

- 채권시장에서도 국채가격 동반 급락함
- 영국 국채가격 급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에 이어, 주요국 국채시장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스템 위기(Credit Crisis)나 Fiscal Crisis로 확대될 위험 고조
- 현재 직면한 global poly-crisis의 결정적 위험요소에 해당
-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자금경색도 이러한 위험의 한 유형

Worldwide 10-year government bond yields by country 2020-2022

by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Oct 4, 2022



2. 다중위기의 특징: 위기의 중첩성과 확대 전이 가능성

다양한 외생적 충격(팬데믹, 전쟁, 인플레이, 에너지 금리인상)에 의해 야기된 현재 상황은 여러 성격의 위기가 중첩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과거의 위기와 구분

*복합위기와 개념적으로 차이: 다중위기 상황에서는 상충적인 위기들이 혼재

현 경제위기의 다중성과 확대 전이 가능성

- 각국 공통의 위기: **고물가** 경제난+ **고금리** 충격
- 미국 제외 국가들: **고환율** 위험 추가
- EU국가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으로 **에너지** 위기도 추가
- 이에 더해 각국은 공통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더 큰 수준의 잠재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에 직면: **금융(신용)위기** or **재정위기** 전이 위험

3. 정책적 접근: 정책도구의 한계

- 지금의 세계 경제는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중 난제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태
→ 이러한 다중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기에는 정책도구에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팬데믹 이후의 **tight**한 노동시장 문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에선 생기는 물가 불안은 금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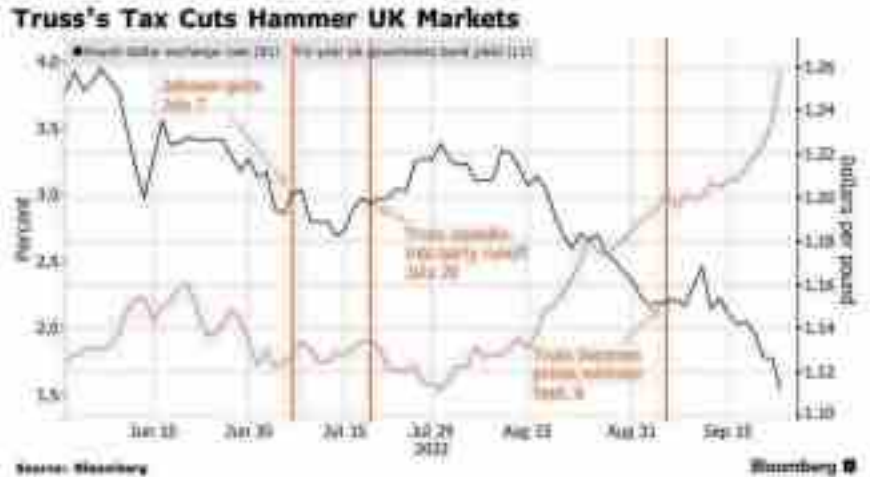
- 무리한 Inflation 통제 시도의 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어, 각국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거나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임
→ 예외적인 조치의 활용이 정책적으로 점차 불가피해지는 것이 현실!

3. 정책적 접근: 예외적 조치 불가피성

대표적 사례들

영국

- BOE는 금리 인상 중이었으나, Truss 총리의 적자예산안 (mini-budget) 발표 이후, 자국 채권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연기금들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소신을 굽히고,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국채매입(QE, 양적완화)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음



3. 정책적 접근: 예외적 조치 불가피성

미국

- Fed는 고강도 금리 인상이 국채시장 유동성 고갈 문제로 번지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으며, Yellen 재무부 장관은 Buyback 조치(QE)의 필요성을 거의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임

Powell:

Rate hikes may slow, but inflation fight hardly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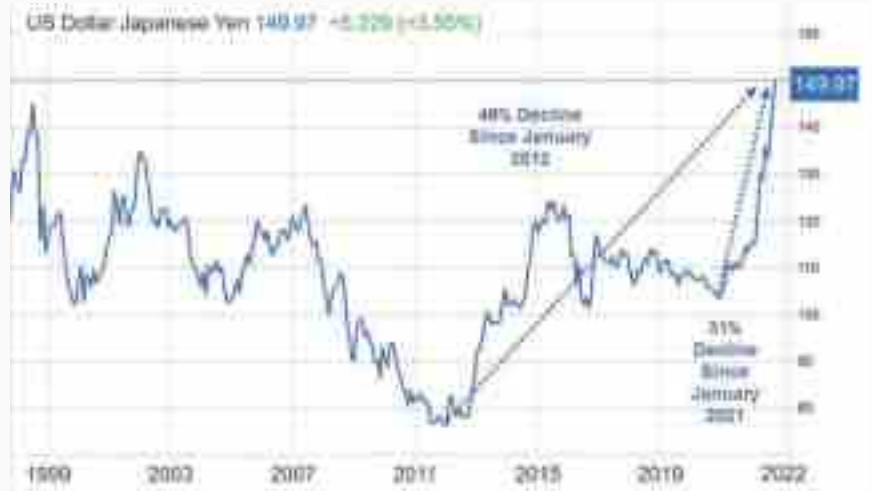
Yellen Worries Over Loss of 'Adequate Liquidity' in Treasuries



3. 정책적 접근: 예외적 조치 불가피성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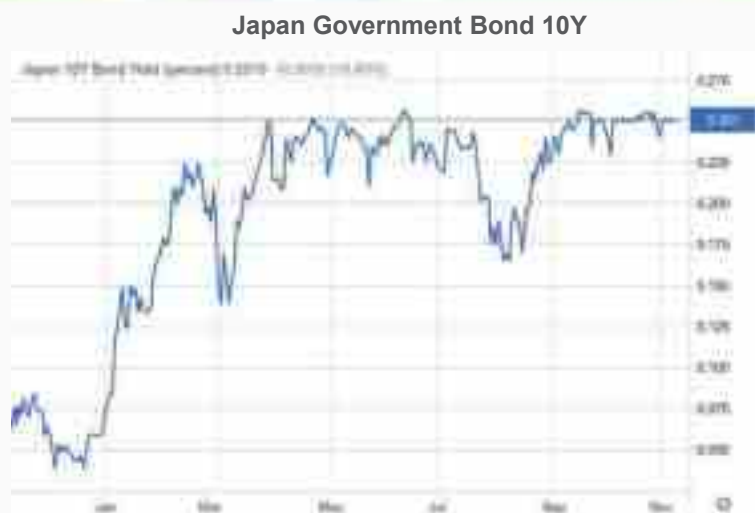
- BOJ는 Abenomics의 일환으로 디플레 뒤편에서 빠져나오고자,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더불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0.25% 이하로 유지하는 YCC 정책을 펴왔는데, 최근 인플레이가 3%에 근접하는 것과 동시에 엔화가 연초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



3. 정책적 접근: 예외적 조치 불가피성

일본

- 과도한 엔화 하락 방지 위해 미국과 금리차를 줄여야 하나, 사전 준비없이 YCC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 일본 국채시장이 붕괴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재정위기로 확대될 수 있어, YCC 정책을 사수
- 엔화 초약세 현상에 외환시장개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함
- Global Macro(고금리)에 역행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은 Hedge Fund들의 공격 대상
- 8개월 째 일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이 0.25% 근처에서 등락 중, 미국 Fed가 고강도 금리인상을 지속하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움



3. 정책적 접근: 경제 예외주의

Question: 현재 인플레이션 통제 시도를 약화시키거나 그에 역행하는 조치는 과연 부적절한가?

위기 국면에서 예외주의 경제정책(Economic Exceptionalism)이 내포하는 정치성과 실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외주의적 정책이 현재 만연한 경제이론에 입각한 원칙론적 접근의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Jacqueline Best의 연구는 이에 대한 부분적 답변을 제공

Jacqueline Best

- 캐나다 오타와 대학 정치학부 교수
(the School of Politic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Ottawa)
- 국제관계, 정치경제, 사회적 이론이 교차하는 영역의 연구자
-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 물가통제 시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Economic exceptionalism in times of crisis"



3. 정책적 접근: 경제 예외주의

Jacqueline Best

"중앙은행들의 현재 인플레이션 통제 시도는 과도한 비용 초래 가능성 높아"

- 일련의 외생적 충격들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 Inflation을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시도는 또 다른 불행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과도한 비용을 치뤄야 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물가를 잡지 못한 책임을 들어,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어떠한 경제적 비용을 무릅쓰고 서라도 물가를 통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결국 정치적 문제가 결부돼 있음을 의미)
-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현재 분노는 나중에, 특히, 주택시장에서, 고금리 대한 더 큰 분노로 대체될 수 있고, 거시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금융위기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

4. 재정정책 대응: 기본 방향

기본 방향: 글로벌 차원의 긴축 기조에 동조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

- 기본적으로 긴축 통화정책에 동조적인 방향으로 재정정책 방향 설정
- 정책 공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의 중요성

재정정책 기조

- 현 국면에서 확대재정은 피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
- 과거보다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비율 증가 세도 함께 통제
-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진된 재정여력(fiscal space)의 회복이 특히 중요함
- 재정위기 가능성 상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



4. 재정정책 대응: 운용 지침

지침 1:

- 긴축정책이 취약한 경제주체에 미치는 충격이 극심해지는 경우 재정을 통한 선택적 지원 활용

- 긴축 부작용 최소화 위해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기존에 편성된 재정규모 내에서 재원의 활용 용도를 전환하는 조치를 우선

- 재정지원 조준정책(targeted fiscal measures)
 - 경제 내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조준하여 설계된 선택적 지원정책은 위기국면에서 효율적 재정 운용의 필수 요건



4. 재정정책 대응: 운용 지침

지침 2:

- 고강도 긴축 통화정책으로 추가적인 잠재적 위기 발생이 감지될 때에도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
- 다만, 필요한 재정지원이 일시적 수준을 넘거나, 유동성 공급이 근본적인 문제일 때는 긴축속도 조절
- 각국마다 여건에 따라 긴축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위기 국면에서 예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위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과 재정의 공조 대응이 중요

회사채 시장 유동성 위기

- 물가안정 위해 BOK가 전에 없는 빠른 속도로 금리를 높이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고갈 문제가 대두
- 정부는 채권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내년에 금리가 정점을 지날 때 상당액의 회사채 차환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BOK도 미 Fed처럼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정책 대응: 운용 지침

지침 3:

- 지출 전체 규모를 늘려 대응하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재정을 관리
- 이 때 감내할 수 있는 재정적자의 규모는 이자율-성장률 격차와 국가채무비율의 곱을 기준으로 함

기초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순이자지출)

기초재정수지 비율 = 기초재정수지/명목 GDP, 국가채무비율 = 국가채무/명목GDP

• **기초재정수지 비율 $\approx$ (이자율 - 성장률) * 국가채무비율**

- 이자율 = 3.0%, 성장률 = 4.5%, 국가채무비율 = 50%라 하면,
GDP 대비 약 0.75%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기준점
순이자지출이 대략 GDP의 1% 정도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점은 1.7%
- 위기 대응 필요 시 감내 가능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대략 3%로 볼 수 있음

4. 재정정책 대응: 운용 지침

지침 4:

- 취약계층 보호나 잠재 위기 방지 외에 일반적인 경기 부양 목적의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투입은 피하는 것이 원칙
-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시점에 중앙은행이 소기의 물가안정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해지는 것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은 금융정책과 공조 유지 차원에서 적절치 않음

- 예년과 같이, 소비진작을 위한 일반 가계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은 피해야 할 것임
- 다만, 급격히 높아진 금리로 한국판 sub-prime mortgage 사태가 예측되는 경우, 채권안정화 기금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산 위험에 처한 취약 가계에 한해 모기지 상환 관련 이차보전 지원책 등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Part B.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 평가

1. 건전재정 기조 구현

1. 건전재정 기초: 재정지출

총지출은 2023년 5.2% 증가한 이후, 점차 증가세를 축소해가는 것(3년 후 증가율 4.2%)으로 계획

- 새 정부 첫 해 국정과제 예산의 신규 투입을 감안 시, 8~9%대에 이르는 이전의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평균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인 연평균 4.6%로 낮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지출을 처음엔 많이 늘리되, 나중엔 조금만 늘리겠다는 식의 재정운용('근고원저형')은 과거 중기재정계획의 전형적인 형태로, 당초 공언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나중으로 유예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22~'26년 **재량지출 평균 증가율이 물가상승률 이하인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정 가능한 지출 범위 안에서는 예산의 실질가치를 동결 또는 다소 줄인 비교적 **강한 지출통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22~'26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 증가율
총 재정지출	657.3	672.5	685.0	699.7	699.2	720.0	4.0
(국외지출)	9.0	27.0	3.2	4.0	4.4	4.0	
= 국외지출	303.2	302.7	341.0	351.8	382.5	403.0	7.5
(비율)	46.3	45.0	50.0	50.3	54.7	55.9	
= 국외지출	304.1	340.8	297.3	306.0	316.0	323.0	1.5
(비율)	46.3	50.7	43.0	43.7	45.3	44.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2차 추경 기준

1. 건전재정 기초: 건전화 성과

- 재정적자와 채무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지출통제 노력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둠

i) 직전 3년간 연평균 100조원 대에 이르는 관리재정수지적자를 50조원 대 후반으로 낮추어야 하는 재정건전화 일차적 과업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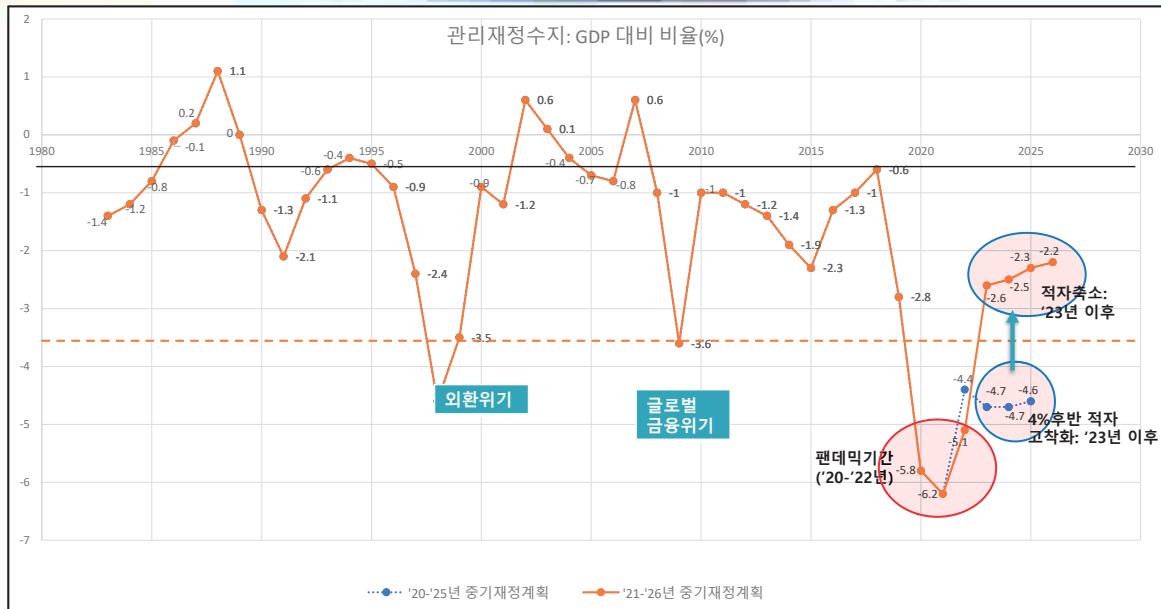
ii)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간 빠르게 상승했던 국가채무 비율을 '26년까지 50% 중반 이내로 통제하는 것

→ 정부 준칙안(적자 상한 3%)을 충족함과 동시에, '25년 채무비율을 지난해 중기재정계획보다 7.4%p 감축

- '23~'26년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은 평균 2.4%로 직전 3년 평균(5.7%)의 42% 수준으로 크게 축소
- 이전의 GDP 3~4%대 통합재정수지적자도 0.6%선(13.5조원)으로 균형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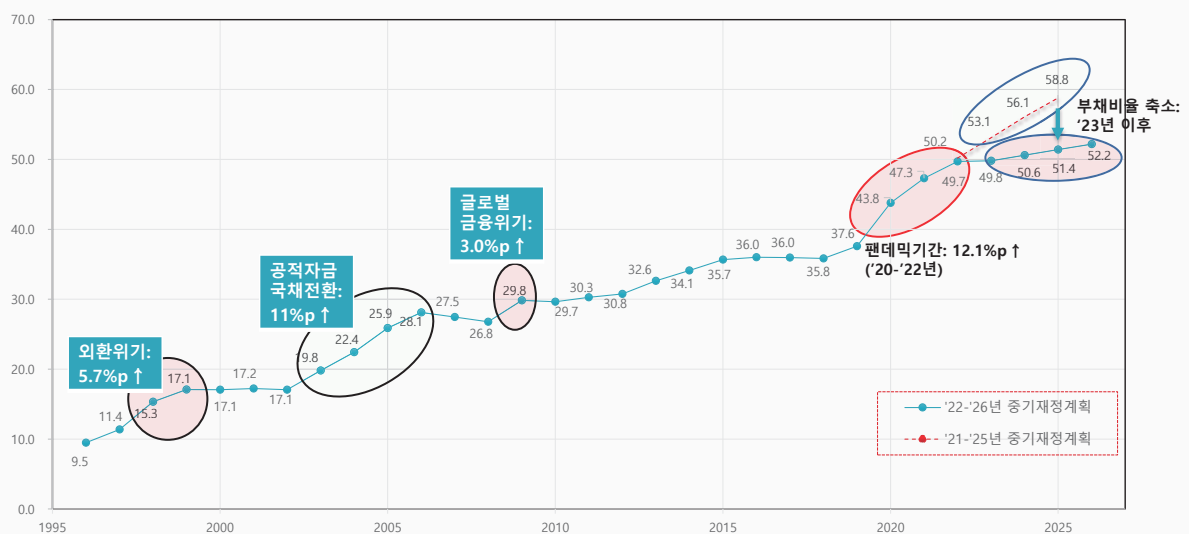
- 한해 2~3%p까지 급등했던 채무비율을 내년에는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그 이후에도 0.8%p 내외로 통제한다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

1. 건전재정 기초: 관리재정수지



1. 건전재정 기초: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1996-2026년



Part B.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 평가

2. 지출구조정 성과와 한계

2. 지출구조조정 : 지출 총량 제어 다소 미흡

- '21~'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비교했을 때, '22~'25년 계획에서 총지출은 축소되지 않고 약간 확대
 ✓ '23~'25년 지출이 '22~'25년 계획에서 전년 계획에 비해 약 4~8조원 증가한 모습을 보임
- 결국, 총지출의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하여 이번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지출을 축소하기보다는 미세조정된 것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1~'25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1	'22	'23	'24	'25	'26	증가율
• '21~'25년 계획(A)	555.0	564.4	534.7	553.2	591.1	-	5.5

* '22년은 본예산 확정, '22~'26 증가율은 '23~'26년 기준

<'22~'25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2년 본예산 총량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 증가율
총 재정지출	555.7	573.5	609.0	603.7	669.7	4.0

2. 지출구조조정: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

- 지출 총량과는 달리 정부는 재량지출에 대한 예산편성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 중립적인 기초에서 통상 경상성장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재량지출을 '22~'26년 기간 중에 물가상승률 보다 적게 증가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재량지출 실질가치를 감축하였을 뿐 아니라,
 - ✓ '23년 예산편성에서 305조원 규모 전년도 재량지출을 297조원으로 줄여, 적극적 재정안정화 의지 보임
 - ✓ 이는 '21~'25년 중기계획에서 당초 323조원 수준으로 계획하였던 '23년 재량지출을 '23년 예산안에서 297조원으로 크게 축소한 것이어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줌

<'21~'25년 장기재정계획> (단위: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총 재량지출	338.0	338.9	336.8	338.7	333.2	331.3	3.5
(국회권)	33.26	33.01	33.31	33.16	33.31	33.21	-
→ 의무지출	304.7	305.9	303.5	305.5	300.0	298.1	6.5
(국회권)	26.73	26.71	26.76	26.73	26.53	26.49	-
→ 재량지출	298.4	302.8	299.3	302.2	273.5	270.4	4.5
(국회권)	26.53	26.30	26.55	26.43	26.78	26.72	-

<'22~'26년 장기재정계획: 재원> (단위: 조원, %)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 증가율
총 재원지출	338.7	338.8	338.0	338.1	338.0	338.0	4.8
→ 재량지출	305.5	304.8	297.3	298.0	298.0	298.0	1.8
→ 의무지출	333.2	334.0	340.7	340.1	340.0	340.0	7.5

2. 지출구조조정: 비효율적 의무지출 재구조화

- 지출 총량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경직적인 지출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
 - ✓ 구체적으로 의무지출의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재정건전화는 달성되기 어려움
 - ✓ 특히, “국제수입과 자동 연계되어 있는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신속히 이루는 것이 관건

-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22~'26년 기간 총수입 증가율 4.4%보다 다소 높은 총지출 4.6%를 4% 초반으로 좀 더 낮추는 것이 이상적임
 - ✓ '22~'26년 기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너무 높은데, 이는 주로 '23년 의무지출 증가율이 12.7%(38.6조원)로 급격히 증가한데서 비롯됨
 - ✓ '23년 이후 증가율 또한 6%대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보다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의무지출 중에서 경직적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높은 항목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함
 - 그렇지 않으면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적어도 '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량지출의 명목가치를 동결하는 노력이 요구됨

2. 지출구조조정: 경직적인 지출구조 개선

-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도 12개 분야 중 교육(14.2%)과 일반·지방행정(13.9%) 지출은 10%대 증반의 높은 증가율!

※ 2022~2026년 분야별 세원배분 계획 ※

구분	'22	'23	'24	'25	'26	'22~'26 연평균
총 지출	602.7 (18.6)	636.3 (20.2)	668.7 (19.8)	699.1 (20.4)	728.8 (21.2)	(18.8)
1. 보건·복지·교육	212.7 (35.3)	226.4 (35.6)	238.6 (35.7)	254.4 (36.4)	269.9 (37.0)	3.5
2. 교육	84.2 (13.8)	91.1 (14.3)	100.0 (14.9)	106.7 (15.4)	115.9 (16.1)	5.9
3. 문화·체육·관광	8.1 (1.3)	8.3 (1.3)	8.7 (1.3)	9.0 (1.3)	9.1 (1.2)	0.1
4. 환경	13.9 (2.3)	12.4 (1.9)	12.9 (1.9)	13.2 (1.9)	13.3 (1.8)	-0.2
5. R&D	29.6 (4.9)	30.7 (4.8)	32.0 (4.8)	33.2 (4.8)	34.4 (4.7)	3.7

구분	'22	'23	'24	'25	'26	'22~'26 연평균
6. 임업·농수기림 해녀직	31.1 (5.2)	31.7 (5.0)	36.6 (5.3)	37.4 (5.4)	38.1 (5.2)	3.2
7. SOC	28.0 (4.7)	27.1 (4.3)	25.5 (3.8)	24.9 (3.5)	24.4 (3.3)	-1.8
8. 농업·수산·어업	31.7 (5.3)	34.2 (5.4)	34.7 (5.1)	34.7 (5.0)	34.9 (4.9)	1.3
9. 국방	34.0 (5.6)	37.1 (5.8)	39.2 (5.7)	41.8 (6.0)	44.6 (6.1)	4.1
10. 외교·통일	3.8 (0.6)	4.4 (0.7)	4.7 (0.7)	5.0 (0.7)	5.2 (0.7)	0.2
11. 공공서비스·안전	22.1 (3.7)	22.8 (3.6)	23.8 (3.6)	24.7 (3.6)	25.4 (3.5)	3.0
12. 일반·지방행정	99.3 (16.4)	111.7 (17.6)	120.3 (17.9)	126.5 (18.2)	132.1 (18.7)	7.3

2. 지출구조조정: 개선과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은 현재 재량지출 사업으로 수행하는 고등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 분야 관련 사업들의 재정소요('23년 기준 13.5조원)를 의무지출 중 하나인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이용하여 충당함으로써, 재량지출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임

교육 분야 지출(단위: 억원)

-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 신설 추진

구분	'22	'23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297,308	294,3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293,999)→(292,606)억 원 • 유아교육비 보조금: 1억(29,280)→(4,330)억 원
• 고등교육	121,844	113,280	• 대학전설비·교도비: 1억(4,389)→(4,382)억 원 • 국립대학발전기금(기초지원) 1,207→(1,779)억 원 • 지역사회대학 협력기금: 1억(1,165)→(1,040)억 원
• 평생·직업교육	11,985	12,291	• 평생교육마스터: 1천(14)→(90)억 원 • 국가장학전망교육진흥사업(20)→(26)억 원 • 전문대학 미래 기반 조성(200)→(221)억 원
합 계 (교육권 제외시)	431,137 (291,073)	419,895 (288,577)	14.2% 증가 (△1.3% 감소)

Part B.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 평가

3.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정부안 평가

3.1 준칙 도입 필요성: 통제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 정부활동의 포괄적 재량과 탄력적 기능을 증시하는 준칙 회의론자의 주장과 달리, 현대국가 개정운용에 관한 역사적, 실증적 연구결과는 국가경비팽창 법칙과 적자편향 가설을 지지함

Wagner's Law: 국가경비팽창 법칙

-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늘어나는 속도도 경제규모보다 더 빠름”
-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

Deficit Bias Hypothesis: 적자편향 가설

- “경기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경향이 매우 강함”
- 대부분 국가는 경기호황 국면에서 크게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부채를 갚는데 이용하기보다는, 그 해 정부지출을 더 크게 늘림으로써 재정수지를 흑자가 아닌 적자로 만들

원인

- 경제발전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 행정부처의 이기주의
- 선거에서 예산의 정치적 수단화
- 다음세대가 갚아야 빛에 무관심한 현세대의 무책임

3.1 준칙 도입 필요성: 재정준칙의 글로벌 표준화

105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정준칙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도입

재정준칙 도입 현황

- 재정준칙 연원: 1994년 뉴질랜드가 채택한 인플레이션 목표의 도입으로 시작, 그 이후 의무적 균형예산, 채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한도액 설정 등 다양한 준칙이 여러 국가에서 채택 (Kopits: 2001)
- 현재 105개 국가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는 재정준칙 제도를 운영(IMF 편람 2022)
- 1990년 7개국만이 재정준칙 보유
 - 선진국5개 + 신흥국 2개
- 2015년 90개국 중 64개국 재정준칙 도입
 - 1990년 대비 9배로 확대

«재정준칙 도입 국가 추이»

	선진국 (31개)	신흥국 (36개)	비도입국 (22개)	계 (90개)
1990	5	2	0	7
1995	12	3	0	15
2000	19	7	2	28
2005	21	18	2	41
2010	20	22	6	49
2015	27	28	9	64

출처: IMF, Fiscal Rules Database, 김재원(2022) 개인분



3.1 준칙 도입 필요성: 중장기 재정유지가능성

Question: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Why Now?

- 확대되는 재정 역할 효율적 수행 위해선 준칙 통해 재정안정화 기반 확보 요구”
 - 재정역할 확대 추세 + 재정정책 정치화 가속 +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 급증
 - 재정여력 급속 소진,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 재정기반 강화 위해 재정안정화는 필수적 과제
- 코로나 팬데믹 과정 전세계적 **재정팽창** + 유동성 축소에 따른 **고금리** 확산
 - 재정위험 증대로 일부 국가에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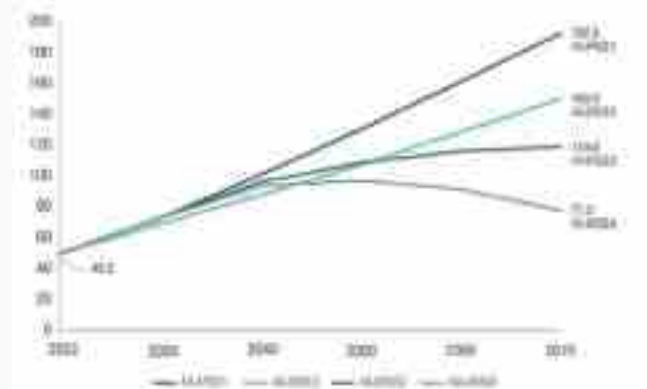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기반 강화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발전 기회 확보”

참고: 장기 재정전망: 예산정책처(2022.9)

- 시나리오1(재량지출: 경상성장률로 증가 & 비중 = 12.8%11.7%): 현행제도 유지된다는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72.1%에서 2040년 100.7%, 2050년 139%, 2060년 161%, 2070년 192.6%로 증가 전망
→ 2020년대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매 10년마다 약 30%p 상승

- 시나리오2(비중=11.7%): 시나리오1보다 증가속도 다소 낮아져, 채무비율 2070년 149.8%까지 상승 → 매 10년에 20%p 상승
- 시나리오3(재량지출 실질가치 동결): 2040년까지 10년마다 13%p 증가, 이후엔 10년에 약 5%p 증가
- 시나리오4(총지출: 경상성장률로 증가, 지출 구조조정): 2050년 경 채무비율은 97.2%로 상승한 후, 지속 하락하여 2070년 77.3%까지 낮아짐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비율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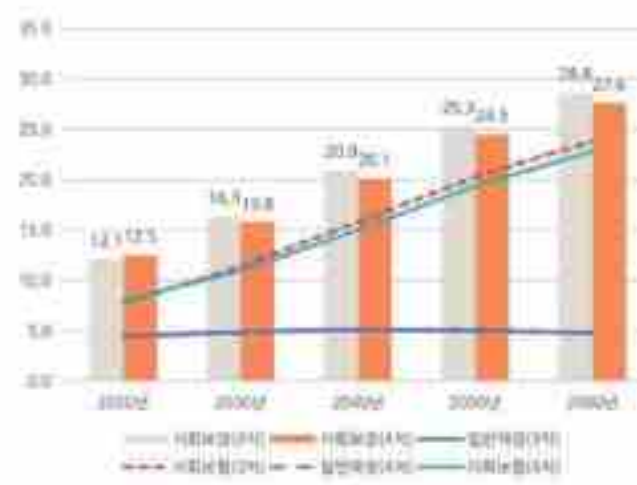


참고: 복지재정 장기 추이: 2040년 중복지 도달

복지재정 장기전망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지출전망(GDP대비): 2020년 12.5% → 2060년 27.6%
- 2018년 전망 대비:
2020년 12.1% → 12.5% 상향조정
2060년 28.6% → 27.6% 하향조정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보다 높은 수준
- 20년 후 저복지 → 중복지 전환
-2040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현재의 OECD 평균에 해당하는 20.1%에 이르러, 중복지 국가에 포함됨
- 사회보장위 복지지출 증가속도: 연 0.4%p
10년간 4%p, 20년간 8%p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속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지출 전망 비교>
3차(2018년) vs 4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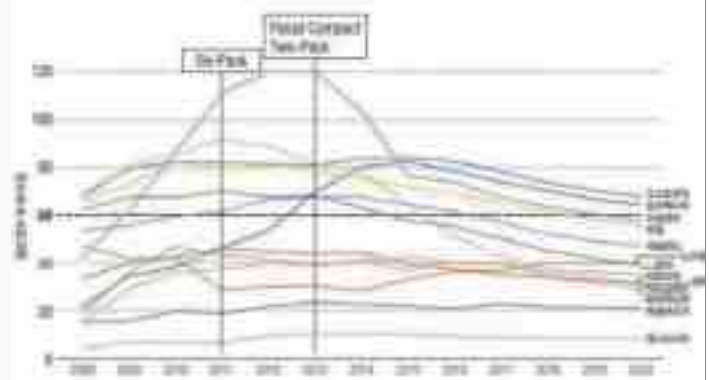
3.2 준칙 도입 효과 : 재정안정화 효과

- 준칙의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의 재정준칙 순응률은 50%에 이름(Reuter, 2018)

- 재정준칙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 다수 존재
 - Tapsoba, Do National Numerical Fiscal Rules Really Shape Fiscal Behaviours in Developing Countries? A Treatment Effect Evaluation. Economic Modelling, 2012
 - Cordes, Kinda, Muthroora & Weber, Expenditure Rules: Effective Tools for Sound Fiscal Policy? IMF 2015
 - Reuter, When and Why Do Countries Break Their National Fiscal Rul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19

< EU의 국가부채 추이 >

*단위: GDP 대비 비율



*정성호(2020), 재정정보원

3.2 준칙 도입 효과 : 실증연구 결과

- 채무준칙 도입국 위기 이후 채무수준을 더 빠르게 안정화 (Figure 2.9)
-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재정수지를 더 큰 폭으로 개선시킴
- 수지준칙 도입 국가들은 이자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재정수지를 더 큰 폭으로 개선시킴

< 재정준칙 도입 효과 > (IMF, 2021.10)

Figure 2.8. Government Reaction to Increases in Debt and to the Interest Bill

Governments tend to react to increases in debt and to the interest bill by tightening the primary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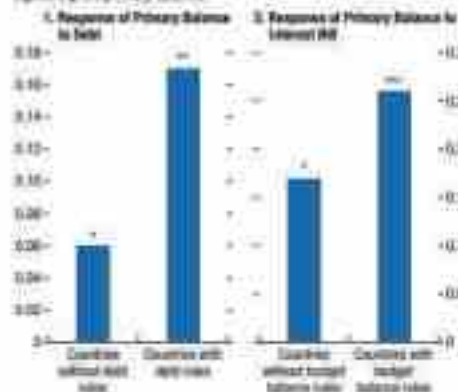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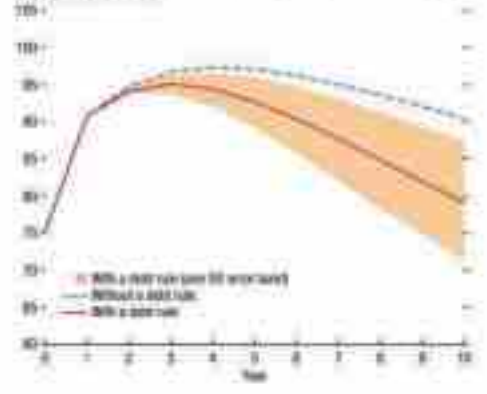


Figure 2.9. Fiscal Prudence after an Increase in De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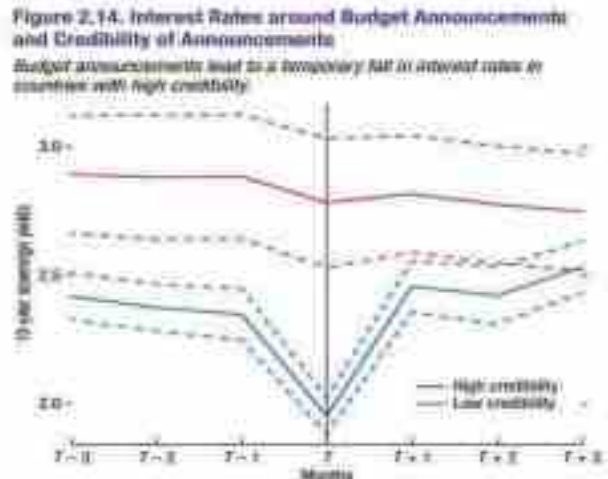
Countries that followed a debt rule typically managed to reduce a jump in debt faster than others.



3.2 준칙 도입 효과: 실증연구 결과

재정운용의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낮은 이자비용으로 국채 조달 가능(아래 그림)

< 신뢰도 높은 재정운용 효과>
(IMF, 2021.10)



3.3 정부안 평가: 주요 내용

비상경제장관회의(2022.9) 기재부 도입안: 학계 견해와 국회에 상정된 준칙 관련 다수 법안, 해외 운용 사례·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정준칙 재설계 → 정부 기존 안(2020.10) 수정

	기존안('20.10월 발표)	개정안		기존안('20.10월 발표)	개정안
관리지표	통입수지+국가채무	관리수지(국가채무)	예외사유	추경편성요건과 다름	추경편성요건과 같음
한도식	$(\frac{\text{국가채무}}{GDP}) \times (\frac{\text{통입수지}}{GDP}) \leq 1.0$	관리수지 $\leq 3\%$ 이하 (채무: GDP% 초과시 $\leq 2\%$)	예외사유 소멸 후 한도적용	예외기간 중 증가된 채무를 한도식에 4년째 걸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재착용	즉시 재착용
발적근거	시행령	법률	한도재검토	5년마다 한도재검토	하동
시행시기	법 개정후 약 3년 유예 ('25년 적용)	법 개정후 바로 적용			
판화규정	< 장기 문화서 > $(\frac{\text{국가채무}}{GDP}) \times (\frac{\text{통입수지}}{GDP}) \leq 1.0$	삭제 (통입액: 경기변동률 전도 배 적용)			
세제당여금	국가채무 상환비용 상환(30~50%)	확충			

3.3 정부안 평가: 개선사항

- ①재정통제 강화 ②기준 단순화 ③법률 근거 ④즉시시행 측면에서, 종전 도입안을 개선했다는 긍정적 평가

1. 이원화된 수지준칙

- 국제 표준의 수지준칙을 채무지표 활용 통해 보완

기본적으로 관리수지 상한을 GDP 3%로 설정
국가채무 GDP 60% 초과시 수지 한도 2%로 축소
고령화 등으로 채무비율 지속 상승하는 현실 감안
채무한도보다는 채무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방식

*준칙유형 채택 현황:
수지(93개국) > 채무(85개국) > 지출(55개국) > 수입(17개국)

2. 관리재정수지 이용

- 적자보전채무에 직결되는 관리재정수지 이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통한
재정관리는 채무통제에 미흡

- 통합/관리수지(GDP%) : ('20결산)△3.7/△5.8
('21결산)△1.5/△4.4 ('22 2차추경)△3.3/△5.1

3. 적용 예외사유 통해 재정의 역할 담보

- 추경편성 요건(국가재정법 제89조) 충족 시 준칙 적용
예외 인정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②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국
가재정법 제89조)

- 예외사유 소멸 이후 준칙 즉시 적용 및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의무화

4. 국가재정법 상 법률적 지위

- 준칙의 구속력 확보 위해 시행령 대신 법률에 근거
- 이를 통해 국회의 준칙관리기준에 대한 심사권 보장

*준칙 도입국의 60% 이상이 헌법 또는 법률에 준칙
근거 마련(IMF)

3.3 정부안 평가: 적자 한도 설정

Question: 정부가 제시한 수지준칙으로 국가채무 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가?

<부채의 장기균형 수렴>

- 5% 내외 명목성장률 유지:
관리재정수지적자를 GDP 3%내로 통제하는 경우, 국가채무비
율은 GDP 60% 수준으로 근접
- 5% 내외 명목성장률 유지: 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되더라도,
준칙에 따라 적자를 GDP 2%내로 통제하면, 채무비율이 60%선
으로 복귀하는 회복력 존재
- 명목성장률이 4%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적자를 GDP 2%내로 통제하면, 동일한 회복력 존재
- 명목성장률이 4%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를 GDP 2.4% 수준으로 통제하면,
채무비율은 장기적으로 60%로 근접

<부채 장기 수렴 조건>

$$\begin{aligned}\lim_{T \rightarrow \infty} D_T &= \lim_{T \rightarrow \infty} \frac{D_0}{(1+g)^T} - \frac{B}{(1+g)^{T-1}} + \frac{B}{g}(1+g) \\ &= 0 - 0 + \frac{B}{g}(1+g) \\ &= \frac{B}{g}(1+g)\end{aligned}$$

D_T : T기의 국가채무비율

g : 향후 명목 GDP 성장률

B : 향후 재정수지적자 비율

D_0 : 현재의 국가채무비율

1 : 현재의 명목 GDP

3.3 정부안 평가: 수지준칙 + 채무준칙?

Q: 보다 엄격한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수지준칙 이외에 채무준칙을 추가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

A. 채무준칙의 비현실성

- **단순 채무상한제의 문제**
고령화, 저성장, 복지제도 본격 확대 추세(남북통일 현실화)로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 채무비율을 너무 높게(예: 100%) 설정하면,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상실
-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비율(예: 50~60%)은 장기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워 준칙무용론 대두될 가능성
- 또한 한 국가의 적정채무비율은 경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B. 지출준칙의 높은 구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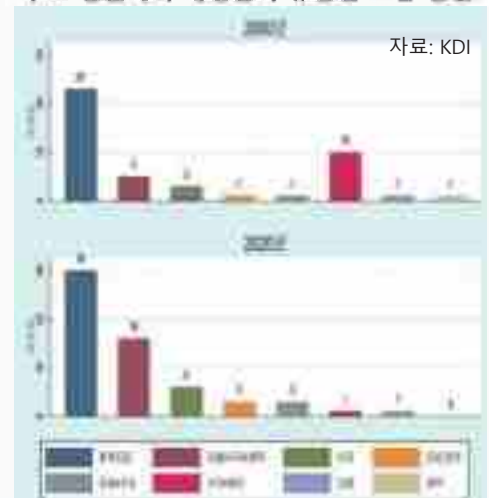
- **재정지출 증가율 상한제의 제약성**
지출증가율을 명목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나, 재정당국이나 의회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게 되어 준칙 도입초기부터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채무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준칙의 법제화가 요구됨
- **이태석(2022):**
지출준칙이 재정여력 제고하고 금융위기 발생 확률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3.3 정부안 평가: 수지+지출 준칙 검토 필요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특히, 금융위기 이후) 지출준칙을 추가 채택함으로써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추세!

- **일정 인구규모 이상 선진국 38개국 중 30개국이 재정준칙 도입**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미도입 국가
- **준칙 도입 30개 선진국 중 "수지+채무+지출 준칙"을 모두 도입한 국가가 19개국으로 가장 많음**
이 중 3개국은 수입준칙도 함께 도입
- "수지+지출 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3개국: 이스라엘,싱가폴 등
- **지출준칙만 도입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지출준칙을 활용하는 국가는 모두 23개국임**
2000년 이후 지출도입이 크게 증가
- 반면 수지준칙만 도입한 국가는 6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준칙 유형별 도입 현황>



3.3 정부안 평가: 포괄적인 면제 사유

Q: 추경 요건에 관한 법조항이 추경편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그와 동일한 내용의 준칙 예외사유는 준칙적용의 엄격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 있음?

- 지금까지의 매우 빈번한 추경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추경 요건이 신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추경이 매우 용이하게 편성되었고, 최근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추경 편성 법적 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
- 법 형식적 측면의 문제
매우 강화된 형태의 준칙 요건을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상의 추경편성 요건과 준칙 예외사유가 서로 충돌할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할 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 재정준칙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거나, 추경요건에 추경이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추경을 편성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법 형식상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나, 추경을 무력화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과 반발이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음

<준칙 예외 사유>

정부안: 국가재정법 제89조 동일 적용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2.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대안: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경우를 실질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사전에 시행령상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경편성과 준칙 적용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4 준칙 법제화와 현실적 타협

- 정부 준칙 도입안은 지출준칙의 배제, 포괄적인 면제 사유, 독립재정기구 미설치 등에서 보완과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도입 자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회 내 정치적 대립구도를 고려할 때, 다소 약화된 내용의 현재 방안을 차선으로 활용하는 지혜 필요
- 준칙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협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부 준칙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충분치 못하고 의회 다수당이 반대로 입법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됨
- 따라서 탄력적 운영 여지가 있는 정부안으로 최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여 입법화에 성공한 뒤, 수 년의 준칙 운영 경험을 쌓으면서 보완해가는 점진적 접근이 현실적

Part B.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 평가

4. 감세기조 세제개편안 평가

4. 감세기조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기조 적절한가?

지난정부 동안 건전재정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입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감세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

감세규모

- 정부는 총 감세규모를 13.1조원으로 추계
- (연도별) '23년 -6.4조원, '24년 -7.3조원
- (세목별) 소득세 -2.5조원, 법인세 -6.8조원

감세규모

- 소득세·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
- 법인세 특성 상 '24년에 더 세수가 많이 감소
-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세수감소를 약 4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 높음

구분	종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계		△13.1	△6.4	△7.3	△0.0	△0.0
소득세		△2.5	△2.5	△2.5	△0.0	△0.0
법인세		△6.8	△6.8	△6.8	△0.0	△0.0
증여·기타세		△1.8	△1.7	△1.5	△1.5	△1.5
종합부동산세		△1.7	△1.3	△0.4	△0.0	△0.0
기타		△0.3	△0.3	△0.0	△0.0	△0.0

4. 감세기조: 최근 세수 급증 현상

- 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일반의 예상을 넘는 것은 사실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활성화로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크게 급증한 상황임

- 2020년 285.5조원 → 2021년 344.5조원 → 2022년 397조원으로
- 2년 만에 111.5조원 증가
- 과거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약 10년 정도 걸렸던 것과 크게 대비



-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예외적인 것으로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더불어 기조효과로 인해 국세수입이 400.5조에 머무르고, 2023년 이후에는 경상성장률에 준하는 연평균 4.9%의 세수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감세기조: 조세부담률 급등

-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조세부담률은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여, 2022년 23.3% 도달!
- 팬데믹 초기 경기침체에도 하락하지 않고, 미미하게 상승한 바 있음('19년 19.9% → '20년 20%)
- '20년 이후 2년간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활성화 등으로 급속한 상승세를 보임
('20년 20% → '21년 22.1% → '22년 23.3%)
- '23년 경기둔화, 기조효과 및 감세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일시적으로 22.6%로 하락하나, 이후 서서히 상승하여 '26년에 22.9%까지 상승
- 팬데믹 이전에 비해 사실상 GDP 대비 3%p 수준의 세입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국세수입 및 조세부담률(전망)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국세수입	285.5	344.5	397.0	400.5	418.5	439.2	458.9	조원
조세부담률	20.0	22.1	23.3	22.6	22.7	22.8	22.9	%

4. 감세기조: 평가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기조 적절한가?

- GDP 대비 23% 초반 조세부담률은 독일과 유사하고 OECD 평균수준과 불과 1% 정도 차이
 - 조세부담률의 단기 급등 원인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필요
 - 그러나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하는 조세부담률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에, 속도를 통제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20년, %)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19.2	18.5	30.0	23.3	25.8	24.2

* OECD 평균 : 호주, 일본과 19년 기준 조세부담률

- 감세기조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예고된 것이었으나,
 - i) 세수급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견해가 다수였고,
 - ii) 정부 또한 세수급등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 이번 개편안의 감세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잘못된 주장이 다수 제기된 것은 일종의 해프닝에 가까움

[종합토론]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 준 한국사회학회 회장

Session3 : 종합 토론



이종화

- (현) 한국경제학회 회장
-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전)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겸 G20 세르파 (2011-2013)



임성학

- (현) 한국정치학회 회장
- (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 (전)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 원장



한상만

- (현) 한국경영학회 회장
-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현) 하나투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전)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복잡계학회 회장



한 준

- (현) 한국사회학회 회장
- (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

